

함께 사는 세상

이제는 **돌봄**입니다



나눔홍보대사
배우 안보현

우리 주변에는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어르신 돌봄은행)은 이러한 어르신들에게 말벗, 가사활동 등의 돌봄활동을 제공하고 이를 포인트로 적립·관리하여, 65세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자원봉사자

전화주세요! 1688-3579



돌봄 대상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의 자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돌봄 봉사자

만 13세 이상, 4시간 돌봄기초교육 수료자

돌봄활동 내용

정서적 지원

말벗, 여가활동 보조, 노인치매 및 우울증예방 프로그램

일상생활지원

식사 도움, 청소, 세탁, 주변 정돈, 미용 등

주택안전관리

전기·가스 확인, 형광등 교체

복지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정보 제공

돌봄포인트 적립·사용·관리

- 돌봄활동 1시간 당 1포인트 적립(적립 및 사용)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돌봄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신청 방법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http://care.vms.or.kr>)에 회원가입 후 돌봄대상자, 돌봄봉사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지널

복 지 정 책 과 복 지 현 장 의 브 리 지

September 2020 VOL.145



포용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영예의 수상자는?

특별인터뷰
서정숙 국회의원

어린이의 희망을 키우는

새생명지원사업은...



“소아암·희귀난치질환 어린이와 함께 합니다.”
 “당신의 후원금으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환아와 가족들에게 행복과 미소를 전합니다.”
 “튼튼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보내주신 후원금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소중히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예 금 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수 협 408-01-003701
 농 협 048-01-066568
 국민은행 099-25-00110-607
 우리은행 007-127792-13-201
 하나은행 176-023563-00105

소득공제 및 새생명 소식안내를 위해 후원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문의 02)2077-3964, 3962 홈페이지 www.kids119.or.kr

대응지침 제9판 부록5 '고위험군 생활수칙'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는 코로나19에 더 취약합니다

* 만성질환자(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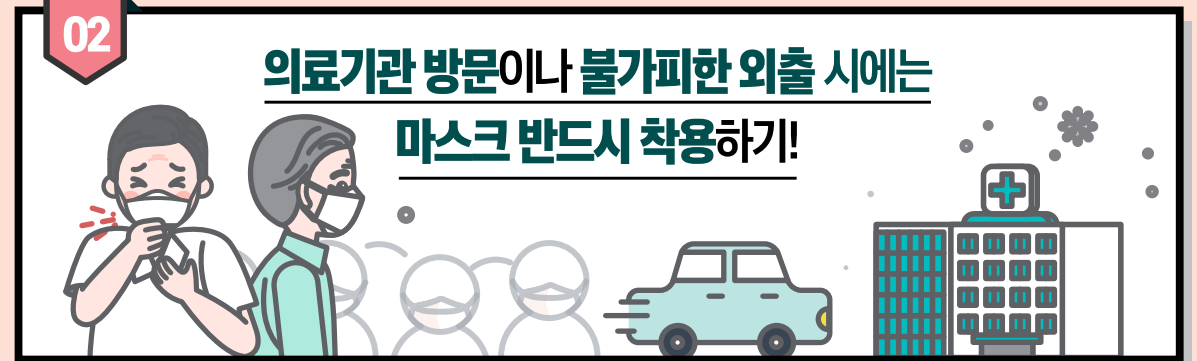
01

가능하면 집에 머무르기!



02

의료기관 방문이나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기!



03

기저질환 치료제 복용은 반드시 하기!



코로나19와의 장기전, 흔들림 없이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September 2020 Vol.145

발행일 2020년 9월 1일
발행인 서상목
편집인 설정곤
편집장 김영아
취재 객대경 이경하 이성우
편집자문위원장 황진수
편집자문위원 김현훈 변용찬 손수호
오단이 이길형 임은희
기사제보 02-2077-3999
구독신청·광고문의 02-2077-3931
발행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우 04195)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www.bokjitimes.com
등록번호 마포 라00204
창간 2008년 8월 1일
디자인·인쇄 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값 6,000원
1년 정기 구독료 72,000원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와 복사를 금합니다.
이 인쇄물의 본문 오른쪽 위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출력용 바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시각장애인용 리더기를 이용하여 본문 내용을 음성출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커버스토리	Cover Story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1999년 9월 7일을 기념해 매년 이날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올해 사회복지의 날은 '포용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화두다.	
기고 밀린 과제와 닦친 도전, 한국 사회보장 혁신 방향 모색	04
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서비스 방향과 지역사회의 역할	08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영예의 수상자는?	12
제21회 사회복지의 날·국민훈장 동백장 수상자 “복지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	14



정책 & 이슈	Policy & Issue
기고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성과와 과제	16
'국민의 삶 보호'하는 인구 정책 필요하다	18
기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과제	20
아동 권리 실현해 '아동이 행복한 나라' 만든다	24
복지신문고 장애인근로자 고용안정 위한 지원 필요하다	26
통계로 보는 복지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는?	30

현장	Field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사회복지종사자 덕분입니다	32
혁신을 담은 사회서비스를 찾아서 위드메이트	36
시설탐방 명도자립센터	40
기고 나는 '사회복지사'다	42
기고 사회복지공무원의 '현장'이야기	44



인물	People
서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46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50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장	53

세계	World
호주 코로나19와 자선기관의 지속가능성	56
일본 코로나19 관련 지원제도	60
독일 전일제 교육 현황	64

문화	Culture
공간의 재탄생 강릉 봉봉방앗간	68
건강과 생활 '코로나19·독감' 동시 유행...대비법은?	72
뉴스, 신간	74





밀린 과제와 닥친 도전:

한국 사회보장 혁신 방향 모색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혁신이 시급한 과제이다. 제도의 완전한 변화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 작동하고 있는 제도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칙이며,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변화도 쉽지 않은데, 전면적인 변화는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그럼에도 감히 사회보장의 혁신을 주장하는 것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4차 산업혁명으로 비유되는 변화는 엄청난 위기이지만, 동시에 제도의 혁신을 가져오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위기 속에서 제도 혁신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위기를 성공으로 전환한 예들을 우리는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밀린 과제: 한국 사회보장의 특성과 문제점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국의 생활보장 체제가 가지게 된 특성 중 하나는 복지의 낙후성이었다.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은 상당 기간 회피될 수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취업이 복지를 대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취업을 통해 소득을 획득하고, 그를 통해 생애기간 동안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면, 굳이 국가에 의해 조직되는 복지가 필요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산업 발전의 과정에서 형성된 노동시장의 분절이 생활보장체계의 이중구조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중심부 노동시장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적 규제와 보호가 강화되어 온 반면, 주변부의 노동시장은 그러한 규제와 보호로부터 방임되어 왔다.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보면 중심부 취업자에게는 조세 부담을 대가로 한 사회보험의 보호가 점진적으로 제공된 반면, 주변부 취업자에게는

보조금과 조세지출(면세 및 감세)이라는 ‘숨겨진 복지’가 사회보장을 대신해 주어졌다. 1980년대 후반 이후의 민주화 물결은 이러한 분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동조합의 조직화는 주로 중심부 취업자 위주로 이루어졌고, 신자유주의의 유연화 압력은 층층이 쳐 있는 고용 사다리의 말단을 향해서 주변부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의 사회보장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기존 제도의 보수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한국이 시장경제의 발전, 민주주의의 확립과 함께 복지국가의 길로 나섰다는 국내외의 평가를 이끌어낼 만큼 매우 인상적이었다.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됐고, 2012년부터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이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사회부조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확장됐다. 2000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됐고, 2008년에는 기초노령연금과 근로장려금 제도가, 2009년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실시됐다. 2014년을 전후해서는 여러 제도의 확장과 발전이 이루어졌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형 급여는 맞춤형 급여로, 근로장려금은 대상의 확대와 함께 개편됐다. 2018년부터는 보편적 사회수당인 아동수당이 도입되었고, 기초연금액 인상과 근로장려금의 대폭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폐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간 진행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과 발전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산출해왔다. 대기업의 호조와

중소기업의 침체, 정규직의 소득 증가와 비정규직의 소득 불안정, 상층과 하층 사이의 점증하는 소득 격차, 세계 최저 출산율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는 삶의 불안정을 가속화했다. 주변부 취업자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남아있고, 제도 확장을 체감하는 정도는 불충분하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25년은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태동을 지켜볼 수 있었던 시간이지만, 그와 동시에 불평등 증가, 고용 불안 확대가 일상화된 시간이기도 하다.

닥친 도전: 코로나19 위기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 생활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는 구조적인 것이어서, 과거와는 구별되는 뉴노멀로의 이행이라는 규정도 등장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대한 진단과 분석은 엄청난 양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는 한국은행이 6월에 작성, 배포한 보고서인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을 통해 간략하게 요약해보자.

첫째, 코로나19 위기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의 행태에 변화를 초래한다. 개인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그로 인한 실업과 소득 감소, 활동 제약 등을 체험하면서, 위험회피 성향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기의 진행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 언택트(untact)의 일상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혁신 저항(innovation resistance)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불확실성을 분산하기 위해 기업은 노동 의존도를 축소하는 한편, 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는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개인과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 강화는 정부의 역할 확대를 유인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 위험의 분산을 위한 사회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한 정부 역할은 커질 것이며, ‘큰 정부’는 상당 기간 대세일 것이다.

둘째, 코로나19 위기는 2009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확산해온 탈세계화의 흐름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술 안보주의, 노동력 이동과 이민에 대한 규제, 자국 기업에 대한 리쇼어링 등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함께 일상화되면서 역내 블록화, 인적교류 약화, 폐쇄적 민족주의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코로나19 위기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필요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기후의 변화가 동물 서식지 파괴, 해빙 등을 초래하여 새로운 바이러스를 출현시키는 경로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탄소세 부과를 통한 세수 증대 필요성도 커지면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관련한 정책의 현실화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넷째, 코로나19 위기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다.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엄청난 양의 정보가 빠르게 처리되면서 정보 재생산의 한계비용은 제로가 되며,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이 재화와 서비스 생산 및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기술은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등의 경계를 해소함과 동시에 모든 것들의 연결을 가능하게 해 보다 지능적인 사회의 출현을 이끈다. 이 변화의 속도와 범위는 패러다임 전환이라 할 만큼 심대하기에 4차 산업혁명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언택트의 일상화는

사회의 전 부분에서 온라인 활동과 교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보편화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것이다. 기업과 정부 또한 관련 산업과 인프라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인데, 이 또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은 노동을 통해 생활해왔다. 그런데 디지털 경제는 이 노동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전통적인 고용 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 유형이 등장하고 확산함에 따라 사회보장과 같은 기존의 사회안전망은 더 이상 사람들의 생활을 안전하게 하는데 기여하기 어렵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는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겠지만, 중단기적으로는 고용 충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저학력, 여성, 대면 서비스업, 임시일용직, 소규모 사업체에 이러한 고용 충격이 집중될 확률 또한 매우 높다. 결국 코로나19 위기와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는 중장기적으로 소득분배의 악화와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이중화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어떤 혁신의 길을 가야 하나?

이미 해체됐지만 여전히 유산으로 남아있는 개발 국가형 생활보장체제의 문제는 밀린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위기와 그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는 새롭게 닥친 도전이 되고 있다. 밀린 과제를 해내기에도 정신이 없는데 닥친 도전까지도 감안해야 하니 참으로 어려움이 크다.

최근 경제 상황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호평을 받으면서, 소득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 연구자와 관련 활동가 사이에서 상상만 되던 것이 현실로 성큼 다가선 것이다.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과 관련한 문제의식은 밀린 과제와 닥친 도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필자는 한국에 소개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기본소득제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간단히 말하면 기본소득제는 새롭다 하지만 실은 새롭지 않고, 현실의 문제와 시대 변화의 결과를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며, 폐쇄적 민족주의에 편승해 국가 간 장벽 쌓기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색해야 할 혁신방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우리가 가야 할 혁신의 길은 사회보장을 개혁해 ‘혁신형 K-사회보장’을 구축하는 것이다. ‘혁신형 K-사회보장’ 구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첫째, 노동시장의 공정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에 따라 노동시장과 고용에는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겠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생활을 꾸리는 방편은 그것이며, 꽤 오랫동안은 여전히 그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혁신형 K-사회보장’ 구축은 노동시장 개선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보다는 상위의 원칙임을 명백히 하고, 그 원칙의 정착과 확대를 위한 임금체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유연안정성 증진과 사회보장 개혁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둘째, 사회보장, 특히 사회보험 적용 대상은 보편

화되어야 한다. 이중적 생활보장체제가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한국의 사회보장은 중심부 취업자 위주로 발전해왔다. 주변부 취업자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혁신형 K-사회보장’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업형태와는 상관없이 모든 취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이 대응하는 사회 위험의 다양한 범주는 정비하고 확장되어야 한다. ‘혁신형 K-사회보장’은 취업자의 생활에 곤란을 끼치는 사회위험을 소득 능력의 상실(재해와 은퇴), 소득 능력의 감소(교육훈련과 돌봄), 소득의 상실(실직), 소득의 감소(취업 지위의 하락)라는 4개로 대분류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의 패키지로 배치해야 한다.

넷째, 사회보장 혁신은 고용 중심 사회보험을 소득 중심 사회보험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사회부조 프로그램의 재구조화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이상의 네 가지 원칙을 가진 ‘혁신형 K-사회보장’의 출발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이미 정책 어젠다로 올려져 있는 고용보험 개혁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사업장 중심 보험료 부과 방식에서 탈피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자본소득 등 모든 소득에 정율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험료 기여의 책임을 취업자, 사업자, 정부로 하면서 국세청이 일괄 징수하는 방안은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④

* 이 글은 9월 7일 진행하는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안전망의 현재와 미래’ 발제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서비스 방향과 지역사회의 역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파편사회 그리고 개인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긴급재난사태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감염병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긴급재난사태로 규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실업, 빈곤, 사회적 고립 등과 같은 사회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존 사회안전망의 구조적 한계를 노출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일반 시민계층의 생활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감염병 사태가 진정된 이후 등장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산업사회의 특징인 파편사회(fragmented society)로의 이행이 더욱 가속화하면서 개인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파편사회에서는 사회 변화와 경제 불안 등 사회적 위기 속에서 오로지 개인의 힘으로 생존해야 하는 상태 즉, 각자도생 사회로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할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위기와 사회문제의 심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에 따라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기존 사회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치는 대면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마비를 초래했다.

사회서비스의 제공 중단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한계계층의 삶의 질을 더욱 저하시켰는데, 특히 이들은 ‘사회적 고립과 생존을 위한 버티기’를 특징으로 하는 감염병 사태의 최대 피해자들인 것이다.

노인·장애인·영유아 등과 같은 돌봄 대상자들은 돌봄서비스의 중단으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 등 각종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의 봉쇄로 평소에 이용하던 서비스 접근이 차단됐다. 특히,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계층의 경우 ‘외로움이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라는 탄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소득 한계계층의 경우 소득 감소 또는 중단으로 빈곤이 악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활동의 제약으로 미약한 사회관계망마저 소실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한계계층 이외에 일반 가구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몰락, 임금근로자의 실업 등으로 인해 빈곤 상태로 내몰리고 있으며, 코로나 블루의 심화로 잠재한 가족갈등이 현재화됨으로써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과 같은 심리·정서적 사회문제까지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서비스 체계의 대응과 한계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방역에 역점을 두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적극 실시했다. 또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생활 불편 최소화 조치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등으로 생활 보장을 위

해 노력했으나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체계로써 그동안 사회 일각에서 논의하고 있던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책 이슈를 공식화했다.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는 사회서비스 체계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시설 봉쇄 조치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본래 지니고 있던 비개방적 특성에 더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격리와 고립의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전문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위기 상황에서 시민을 조직화하고 동원하는 시민사회 주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와 같은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 구조가 ‘시설 내 서비스’ 중심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시설 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상황에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은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조직과 사업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직된 조직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셋째, 위기 상황에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지역사회 내 대응주도 세력의 부재인데, 이는 그동안의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체계 구축 시도가 형식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 제도에 실패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 군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넷째,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네트워크가 공공부
문 중심의 파이프라인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
어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적 접근이 이뤄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민간 내 ‘보이지 않는’ 경계로서 존재하
는 소집단 집합주의(small group collectivism)로
인해 민민 간의 협력구조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지역복지공동체 그리고 사회서비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
편은 불가피해 보이며, 이러한 개편의 방향은 ‘지역
복지공동체’ 구축 및 체계화가 돼야 한다.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은 사회서비스의 생산·소
비·분배, 사회서비스 관련 고용 창출, 복지자원 동
원 및 배분 등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
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지
역사회 중심 사회서비스 체계의 이점인 즉응성, 효
과성, 공동체성 회복 및 함양, 건전한 시민사회 육
성, 사회적 가치 있는 노동의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1. 기본 방향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법적·행정적 제
도 기반 마련,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배분과 민
간 활성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즉, 코
로나19 감염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대응을 원칙으로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민관협력을 통해 민간참여 활성화를 도모해
야 한다.

긴급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은 대상자 선정, 지원제도 및 재원 마련과 같은 기
능을 강화해야 하며, 민간부문은 자원 동원 및 서
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민간부문
은 기존 자원봉사조직(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자
원봉사단, 사회복지봉사단, 종교시설 봉사단 등)의
재구조화 또는 연합체 조직을 구성해 긴급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부문은 시민사회의 자발성에 기반한 복지 기
금 조성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력으로 자
원 확보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2. 구축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상응하는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의 전환, 지
역사회의 역할 강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가 필요하다.

우선,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데, 이는 긴급 상황의 일상화에 대비한 서비스 제
공체계 구축, 즉 ‘시설 내(찾아오는)’ 서비스로부
터 ‘시설 외(찾아가는)’ 서비스의 개발과 확대가 핵
심 내용이다. 또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예로서 ‘방
문보건-재가복지’)를 개발해 지역통합돌봄체계
(Community Care)를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위기 상
황에 대응할 수 있는 주체의 설정, 지역사회 내 가
치 있는 사회적 노동 개발 및 조직화가 필요하다.

위기대응 주체를 설정하는 것은 지원체계의 공식
화와 관련되는데 이를 통해 공공성 확보와 함께 지
역주민의 접근성 확보에 유리하다. 공공부문의 주
체로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여성국과 지역

66

욕구 및 서비스 관련 정보와 기술을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유하면서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플랫폼’
구축과 활용이 절실하다.

99

사회보장협의체, 민간부문의 주체로서는 한국형
사회서비스(KSS) 모형을 개발하고 있는 사회복지
협의회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가치 있는 사회적 노동은 공익성과 지속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상시 노동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익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는 기존의 우수 자
원봉사조직을 공식화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거나 또
는 사회적 경제 영역과 연계한 사회서비스 사업을
개발해 조직화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
를 해소해야 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
에 소득, 복지, 보건·의료, 고용 등에서 극심한 생
활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인구 계층이 지역
사회의 약 10%인 것으로 추정할 때, 사회복지제도
체계 외부에 존재하는 한계가구의 발굴 및 지원체
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해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을 기초로 긴급 상황에서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개입 및 지원 근거를 확보하기 위
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복지플랫폼

‘코로나 이전의 사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뉴노멀(new normal) 시
대’에는 새로운 구조를 갖춘 사회서비스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개별시설 중
심의 복지 욕구 파악과 서비스 제공 형태가 아닌
통합적인 접근, 즉 욕구 및 서비스 관련 정보와 기
술을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유하면서 최적의 맞춤
형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
지플랫폼’ 구축과 활용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자
원의 효율적 조직화와 지역사회의 욕구 해결을 위
한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즉, 클라이언트 개별
화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ICT(IoT, AI 등)에 기반
한 복지 테크놀로지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
단독가구,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한 돌봄 기술의 개
발 및 적용이 시급한 과제이다.❹

* 이 글은 9월 7일 진행하는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안전망의 현재와 미래’ 발제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입니다.

헌신적 나눔 실천... 복지는 사랑입니다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제31회 전국사회복지대회 영예의 수상자는?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사회안전망의 근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1999년 9월 7일을 기념해 매년 이날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사회복지의 날이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한다. 2000년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민간포상인 전국사회복지대회와 함께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기념식이 잠정 연기됐지만 영예의 수상자를 지면을 통해 먼저 소개한다.

제21회 사회복지의 날에는 국민훈장 동백장 1명, 국민포장 2명 등 총 215명의 사회복지 유공자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간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강병권 연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수상하며, 박정애 강진자비원 원장, 故 고치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각각 국민포장을 받는다.

강병권 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은 1983년 어린이

재단 사회복지사로 입사한 이래 37년간 청주, 마천, 나주, 하안, 한사랑마을, 실종아동전문기관,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다.

박정애 강진자비원장은 1973년부터 현재까지 900여 명의 아동을 길러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했으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퇴소 아동 및 시설 거주 아동을 위한 후원 개발, 아동 권익 보호 및 복리후생에 기여하는 등 남다른 열정과 헌신이 타의 귀감이 됐다.

故 고치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제주도 최초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인 평안전문요양원을 설립하고, 22년간 치매 어르신들과 동고동락하며 헌신해왔다. 2014년부터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 ‘건강한 제주복지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했으며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를 건립해 기부식품제공사업 도약의 기회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민포장에 박정애 강진자비원 원장· 故 고치환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대통령 표창은 탁우상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채종병 굿네이버스대전충남본부 본부장, 홍무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장, 지은희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개인 4명과 만승자립원, 롯데장학재단 등 단체 2곳이 받는다.

탁우상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은 35년간 빈곤 노인보호사업 개발, 노인 여가프로그램 보급, 노인 자살예방센터 설립·운영 등 노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으며, 채종병 굿네이버스대전충남본부장은 사례관리 시스템 마련,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발 등 전문적인 경영 철학을 통한 사회복지체계 구축에 노력했다.

홍무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장은 공공기관을 선도하는 장애인 채용 확대계획 수립, 장애 직원 고충상담센터 설치 등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힘썼고, 지은희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누리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사회 만들기에 힘을 쏟았다.

만승자립원은 중증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까지 110여 명을 채용하는 등 지역사회 중증장애인 고용 증대에 기여했으며, 롯데장학재단은 청년 실업 및 일자리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특히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이들의 삶의 질 증진에 공헌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강순옥 노인요양원 붓다마을 사무국장, 서미순 영락노인전문요양원 간호부장, 김영국 우리은행 과장, 이순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상헌 카리타스보호작업장 원장 등 5명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간다.

강순옥 노인요양원 붓다마을 사무국장은 이용 어르신과 보호자 상담을 통해 치매 어르신과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등 노인복지 및 가족복지 발전에 기여했으며, 서미순 영락노인전문요양원 간호부장은 중증어르신을 보살피며 각종 노인성 질환, 치매 어르신 건강 관리, 상담, 간호 및 처치 등에 헌신했다.

김영국 우리은행 과장은 취약·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은행의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 사업을 다수 기획해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했으며, 이순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장은 30여 년간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며 사

회복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힘썼다.

이상헌 카리타스보호작업장 원장은 20년 동안 장애인담보육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며 장애인복지, 재활 및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개인 172명과 단체 28곳 등 총 200곳이 수상한다.

올해 국회의원 공로장 표창은 이봉주 서울대학교 교수가 수상한다. 이봉주 교수는 활발한 학술활동과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실천 분야 등 사회복지학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회복지대상에 강영신 아시아복지재단 대표이사

한편, 제31회 전국사회복지대회에서는 강영신 아시아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사회복지대상을, 이무승 성지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우봉봉사상을 수상한다. 이외에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한 개인 17명과 단체 3곳에 공로상도 수여된다.

강영신 아시아복지재단 대표이사는 50년간 장애인 재활과 교육, 자립을 지원하고 인권·복지증진에 힘썼다. 지역사회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시설종사자 복리향상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했다.

이무승 성지복지재단 대표이사는 30여 년의 지방행정공무원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의 권익증진에 힘썼고, 복지 관련 다양한 단체에서 중책을 맡아 사회복지시설 건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공을 세웠다.❶

글 편집팀

“복지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

국민훈장 동백장
강병권 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강병권
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어렸으며, 어린이재단 홍보개발국장으로 재직 시 ‘KBS 사랑의 리퀘스트’ 담당 부서장 및 후원 배분 위원으로 활동하며 희귀난치병 환아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위해 연간 약 80억원 규모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데 공을 세웠다.

특히, 2012년부터 실종아동전문기관 소장을 역임 하면서 실종가족찾기지원서비스, 자조모임, 상담캠프, 특강 등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종가족의 아픔을 달래고 가정해체 등 실종아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데 힘썼다.

2012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미아방지를 위한 한국형 코드 ‘아담’ 정책개발연구를 수행해 2014년 실종아동법에 포함되도록 하는데 기여했으며, 2015년 ‘아동실종의 이해’ 저서에 공동집필자로 참여해 실종아동사업의 기본서를 발간하는 데 일조했다.

또한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을 이끌면서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일환으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인문학 대학 등을 추진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끌어냈고 아동가족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아동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지역 유관단체와 솔루션위원회를 조직해 지역 현안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관 복지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으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감사, 인천사회복지관협회장 등 사회복지관 정체성 확립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강 관장은 1983년부터 국내외 다양한 단체에 개인 후원자로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2013년에는 30년 이상 장기후원자로 어린이재단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37년여 다방면으로 복지증진에 노력해 온 그의 헌신이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영예로 이어졌다.

다음은 강병권 관장과의 일문일답.

Q _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은?

A _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어린이재단과 대한불교사회복지재단에 감사하다. 힘이 돼준 가족과 함께 일한 동료, 선·후배들 덕분이다.

Q _ 37년 동안 현장에서 일해왔는데, 그간의 소회를 말해 주신다면?

A _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장애인, 노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도록 강점을 찾고 이를 통해 함께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Q _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무엇인가?

A _ KBS 사랑의 리퀘스트 업무를 담당하면서 희귀,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노력했고, 중증장애아동 생활시설에 근무하면서는 생활인 인권과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립체험홈을 운영하며 탈시설화 운동을 전개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장으로서 실종아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5명의 공동 저자들과 ‘아동실종의 이해’라는 책을 발간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Q _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A _ 지난 2월 사회복지관 휴관 조치가 내려지면서 인천지역 20개 사회복지관장과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 코로나19 위기대응 운영을 시작했다. 7개월의 활동을 토대로 ‘코로나19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 위기대응 운영사례연구집’을 발행했고, 언택트 토론회를 개최해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복지관의 대응과 과제를 찾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는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복지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시대다. 가깝게는 동료, 나아가 민관이 연대할 때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Q _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응원 또는 당부의 말을 해주신다면?

A _ 사회복지사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부심을 갖고 우리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 따뜻한 마음으로 이를 해결해 주기 바란다.

Q _ 앞으로의 계획, 목표가 있으신다면?

A _ 사회복지사로 이제 정년이 다 되어 간다. 그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글이나 강의를 통해 후배들이 사회복지사의 길을 가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 퇴직 후에는 내가 사는 동네와 평생 일해온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해외 빈곤 국가의 어린이와 지역을 돕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 ❶

글 박대경 기자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성과와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1999년 8월 국회를 통과해 9월 7일 공포됐고, 이듬해인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국정기조인 ‘생산적 복지’의 꽃으로 표현되었던 기초법이었다.

2020년은 이 법이 시행된 지 만 2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복지제도처럼 쓰이고 불리워 졌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년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선, 생산적 복지부터 돌이켜 보자. 당시 영국 노동당 정부의 수상이었던 토니 블레어(T. Blair)가 주창한 ‘제3의 길(The 3rd Way)’을 벤치마킹한 것이 ‘생산적 복지’였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게다가 그들조차 빈약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도록 요구했으니, 시장론자를 만족시킬 시장의 개혁 방안과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

전망 구축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복지를 하되 시장에 맞게 하겠다는 ‘생산적 복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이어 제3의 국정기조로 선포되었고, 이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기초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기초법이 갖는 ‘두 가지’ 의미

이러한 기초법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싶다.

첫째, 비로소 일제의 유산에서 벗어난 사회복지제도였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국가가 돌보는 당시의 공공부조제도는 생활보호법이었다. 1944년 일제는 조선구호령을 공포해 부조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에는 구호법을 실시했지만 식민지 조선에는 위상을 낮춰 구호령을 적용했던 것이다. 우리는 해방 이후에도 새로운 입법을 하지 못한 채 조선구호령을 기준으로 구빈행정을 해왔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조선구호령을 ‘생활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했다. 우리의 구빈제도는 이 상태로 1999년까지 이어졌다. 55년 만에 식민지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입법으로 기초법을 제정하게 돼 비로소 우리의 공공부조 제도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사회복지법을 연구하는 필자로서는 부족하더라도 우리 법을 갖게 됐다는 점이 무엇보다 뭉클하게 다가왔다.

둘째,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빙하기와 같은 시대를 마감하고 해빙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기초법은 시민사회의 추진 운동에 힘입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입법 사상 아래로부터의 동력에 의해 제정된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한다. 많은 한계점이 있었고 불완전했지만 국민이 국가를 향해 권리로써 복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것이었다. 식민지 제국과 군사독재 권력의 체제에서 국가의 보호라는 가부장적 조치에 의존해오던 가난한 국민이 이제는 자신의 생존권 내지 복지권에 근거해 국가로 하여금 생계급여를 제공하도록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다는 민주 독립국가의 복지제도가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초법은 복지권의 권리장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복지국가의 기본’ 만드는 일 이렇게 보면, 기초법은 굉장하거나 대단한 역사적 진보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4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겨 놓고 비극적인 최후의 선택을 해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던 소위 ‘송파 세 모녀 사건’은 기초법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사건이었다. 그 이후 각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줄을 이어 오고 있다. 우리가 미안해하고 국가가 엎드려 사죄해야 할 일이지만 거꾸로 가난한 국민이 자신의 장례비용을

봉투에 남긴 채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겼으니, 이는 실로 생산적 복지가 사람을 잡은 꼴이다.

기초법의 가장 큰 문제이자 과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이는 실제로 가난하더라도 국가로부터 부조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는 고약한 장치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부양에 관한 한 사적 부양을 우선하며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사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개인만을 국가가 보충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제도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포용적 복지 국가정책은 그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양의무자 조건의 폐지를 입법하는 것이 기초법 시행 20주년을 맞는 현단계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적절한 정책이 아닐까 한다.

적어도 포용적 복지국가라면 부양에 관해 공적 부양이 원칙이 돼야 할 것이다. 공적 부양을 원칙으로 하려면 공공부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개인 간의 부양은 민법상 부양청구와 부양이행이라는 채권채무 관계로 남겨 놓고 사람에게 대한 기본적인 부양은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사실, 가난한 사람이 스스로 가난을 입증해 생계급여를 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제도인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부양의무자에 조건까지 적용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매우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다. 기초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이것은 단순히 공공부조법인 기초법의 한 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수준과 형태를 만드는 일이다. 진정으로 기대해 본다. ❶



‘국민의 삶 보호’하는 인구 정책 필요하다

노동·복지·교육·돌봄·친밀성·연대 회복 위한
정책 실행해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저출산 대책 논의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2만3000명을 기록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혼인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노력에도 출산을 감소는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저출산을 새롭게 접근해 근본적 원인을 찾고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을 시작했다. 총 5회차로 진행되는 토론의 결과를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8월 5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삶과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주제로 마지막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새로운 사회 속 우리의 삶,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근본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박경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삶과 세상에 바치는 글’이란 제목으로 종합토론 발제에 나섰다.

박 교수는 “지금처럼 살기가 팍팍한 시대에서는 재생산보다 생존이 일차적인 인생 과제일 수 있다”며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살 만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재생산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발전주의, 가족주의 체제의 모순을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소수의 승자를 위해 수많은 사람을 경쟁으로 몰아넣고 사회로부터 추방하는 습속을 정지해야 한다는 것.

박 교수는 “사회의 내적 모순이 심화되는 상황에 코로나19의 충격이 덮쳤다”며

원하는 미래 만들기
위한 언어 찾아야

세대별 다양한
삶의 형태
유형화 필요

“이제는 탈성장의 문법과 대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새로운 시대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적자생존과 성장이 아니라 공생과 절제의 미, 그리고 책임이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사회협약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인구 정책의 일차적인 관심은 삶이 돼야 하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삶의 조건인 노동, 복지, 교육, 돌봄, 친밀성, 연대의 종합적 회복을 지향한 정책 구상과 실행,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새로운 삶의 의미가 곳곳에서 생성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며 △귀농·귀촌을 선택하고 새로운 삶을 시도하는 청년, 장년층 △모두가 대기업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 생애 비중 증가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우리는 삶을 객관화하고 물화하는 언어에는 무심하지만,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삶의 이야기에는 눈물바다를 이룬다. 자기의 상처, 고통을 고백하는 것에서 함께 살 궁리를 찾으면서 새로운 대본이 쓰이기 시작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언어를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는 “인구 정책은 국가·제도적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움·노동·돌봄·여가의 통합과 균형이 필요하며 이 네 가지 요소의 비율에 따라 세대별 다양한 삶의 형태를 유형화하고 이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 정책
방향은
‘고용을 통한 복지’

이 교수는 제도적 과제와 관련해 “부처 경계를 넘는 혼합적인 시도가 필요하고 흐름을 막거나 바꾸려 하기보다 ‘관리된 흐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도의 복잡성, 개인화 등 사회변동 배경 속에서 정부 정책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끝으로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반적인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여가의 새로운 균형이 도래할 것”이라며 “프리랜서 등 전통적인 일자리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을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 기본소득제 논의가 심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중백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사회 중장기 정책 비전은 ‘육아가 행복한 국가, 육아를 함께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육아 휴직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종사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도심 내 공공육아시설을 마련해 사내 보육 시설이 없는 대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이 외에도 △지역, 커뮤니티 공동 보육 공동체 구성 및 지원 △공적연금 부과시 자녀 육아 비용을 반영하는 시스템 마련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앞당김, 중·고등학교 6년 체제 1년 감소 등을 통해 사회진출 연령 조기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은 ‘고용을 통한 복지’”라며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기’와 ‘노동시장 이탈 최소화’를 주장했다.❶

글 객대경 기자



이상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투영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과제

장애인활동지원은 2006년 장애인지원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는 장애인 분야 사회서비스의 핵심 사업이 되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활동보조사가 수급자인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으로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다. 수급자인 장애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 활동 지원기관 3자 간으로 구성되나, 현실은 이들 구성원 어느 한 쪽도 만족하지 못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 반영하듯 개원한지 불과 3개월 밖에 되

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장애인활동법 일부개정안이 8건이나 발의됐다. 본고에서는 장애인활동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된 현장의 이슈를 살펴본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이슈

장애인활동지원은 활동지원사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립생활을 돕는 제도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방식은 이용자에게 이용 바우처를 지급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 전체 또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기관지원 방식과 구별된다.

운영방식의 차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자 간 불만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된 내용은 수요자인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전환돼 제공받는 서비스가 줄어든다는 것과 활동지원 서비스의 낮은 수가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이다.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로 전환
장애인활동법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 기준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6세 이상인 사람 중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거나 보장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

즉, 장애인활동법은 65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고 그 이후에는 장기

요양급여를 받기 때문에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요양급여는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요양과 보호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나, 장애인활동급여는 중증장애인의 필요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제도로 두 제도의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령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사회보험인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전가하는 구조이다.

전환에 따라 서비스도 획기적으로 줄어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 중증장애인이 받는 급여가 감소되거나 내용이 제한된다. 예컨대, 재가급여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최대 64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최대 149만8000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는 장애인활동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은 높고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어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표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 비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제도
근거	장애인활동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원	조세	보험료
전달체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예약금 관리·지급) 국민연금공단(절차) 장애인활동지원기관(서비스 제공)	건강보험공단(절차) 장기요양기관(서비스 제공)
월한도액	기본급여 63만5000원~159만3000원 특별급여 27만원~368만6000원	재가급여 56만6000원~149만8000원
부담금	16만4000원(상한)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자료 |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표 2 21대 국회 장애인활동법 개정안

발의일자	대표발의자	주요 내용
2020. 6. 1.	장제원 의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선택
2020. 6. 3.	최혜영 의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선택
2020. 6. 4.	이종성 의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선택
2020. 6. 5.	김예지 의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시 장애유형에 맞는 필요와 요구, 장애의 정도 등에 맞는 내용 평가
2020. 6. 15	장혜영 의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선택 감염병·재난 발생 시 미수급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
2020. 7. 6.	정춘숙 의원	장애인 범위 확대, 활동지원급여비용에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와 활동지원인력급여 포함, 활동지원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 중 선택, 활동지원급여 대리 신청, 활동지원인력의 급여는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고,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급여비용 산정

데 한계가 있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수단적 일상생활능력과 장애 능력을 중시해 급여를 제공하나,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에 중점을 두고 급여를 제공하는 근본적인 차이로부터 연유한다.¹⁾

21대 국회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8건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그중 5건이 수급권자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데 있다. 현행과 같이 65세 이상 장애인활동 수급권자를 일률적으로 장기요양 수급권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2020년 활동보조 수가는 시간당 1만3500원

으로 활동지원사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의존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수가 산정 시에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준수가 가능한 금액으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급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춘숙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활동지원 급여비용에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고, 이 기준에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서비스 질과 상관관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서비스 수가는 근로기준법을 100%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시급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활동지원사의 급여를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및 기

66
어떻게 하면 장애인이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99
 66
 어떻게 하면 장애인이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존재 이유 생각해야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³⁾ 이를 개편하기 위해 2015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201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주요 골자는 신청 자격을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급여체계를 종전 4등급 체계에서 15등급 체계로 세분화했으며, 서비스 재(再)판정제를 폐지하고, 지원 시간도 최대 480시간으로 늘렸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실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적정하지 못한

활동지원 수가로 활동지원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이에 따른 인력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점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존재 이유로부터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논의는 장애인활동지원 근거법에 따라 누가 재정을 부담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급여를 제공할 것인지, 수가 결정에 따른 활동지원사의 처우 및 서비스제공기관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다. 사실 이러한 논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부차적인 문제라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장애인에게 더욱 적절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방향성을 선회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연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활동지원사의 부족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과의 대면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특징이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장기화됐을 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❶

2)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활동지원 분과위원회는 활동지원사 급여 1만1833원, 활동지원사 인건비성경비(사업자부담금) 2212원, 전담인력 인건비 647원, 필수경비 439원을 포함하여 적정수가를 1만5000원으로 산정하였다.
 3) 이만우·김은표(2015), 장애인등급제 폐지 논의의 쟁점 및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099호, 국회 입법조사처, 1-5면

1) 이정량(2019),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고령장애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0권2호, 1218면



아동 권리 실현해 ‘아동이 행복한 나라’ 만든다

아동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
아동 중심의 정책 추진할 것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한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아동 행복도 증진’을 목표로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보편적 복지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에 아동을 보호·양육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다. 이를 위해 ‘아동 권리 존중 및 실현’,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4대 추진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첫째, 각종 정책에서 아동권리가 실현되도록 정책시스템을 마련한다.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이념, 목표 등을 규정한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 부처 아동 관련 계획을 대상으로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 각종 정책에 아동 중심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정책 과정에서 아동 참여, 의견표명 수단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생활 속에서 아동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가칭)아동청원’ 플랫폼을 도입하고 △학생회 법제화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학교에서의 학생참여를 제도화한다.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

아울러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위탁 부모·시설장 등의 ‘후견인 수임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가정 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체벌 금지 법제화’, 인터넷방송 등에 출연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호 지침과 ‘한국판 쿠건법’ 마련을 추진한다.

첫째, 놀이·학습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즐거움 속에서 미래 역량을 개발하도록 한다. 놀이 선도지역 선정, 지자체 중심의 ‘놀이혁신행동계획’ 수립 등을 통해 놀이 확산을 유도하고, 학교에서는 놀이·활동 중심의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공간과 시간 확보, 놀이연계 학습 등을 지원한다.

둘째,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부터 아동건강을 충실하게 보호한다. 건강한 습관 형성을 위한 ‘아동건강관리 3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마음건강 관련 전담인력 확충 및 민간 심리상담 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셋째, 폭력과 사고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교통,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식품·공산품 등 생활에서 아동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동 학대는 △정보공유 및 기관 간 연계 강화 △보호시설 등 인프라 확충 △‘즉각 분리 제도’ 도입 △예방·발굴·초기대응·지원·재발 방지 등 대응단계별 실효성 제고로 근본적으로 근절되도록 노력한다.

첫째, 아동 중심의 공적 보호 체계를 완비하고 돌봄을 확충해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학대, 유기 등 보호필요아동 조사·지원 전 과정에서 공적 전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관별 전문화 및 현장 전담인력 전문성 등 역량을 향상시킨다. 10여 종으로

분산된 아동 시스템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구축하고 급여,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등 이력 관리를 통해 아동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빈곤 등 취약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지역 취약아동(0~12세)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타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안정 지원, 자립 정보 등을 맞춤 지원한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사업’도 본격 추진하는 등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이주 배경 아동의 사회 적응을 위해 언어, 정서안정, 사회성 개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시범도시’를 운영한다.

코로나19 대응 아동 정책 혁신

첫째, 코로나19 등 사회적 돌봄 제약 상황에서 가정의 아동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소득·시간·양육자 역량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부모교육 체계화, 교육 유인책 부여 등을 추진한다.

둘째,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응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한다.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시설별 대응 매뉴얼, 종사자 교육 강화, 탄력적 학사 규정 등을 마련하고, 집단발병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아동 1인당 시설 면적, 인원 비율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해 비대면 아동보호 서비스 시범사업((가칭)아동 AI 서포터즈)을 추진할 계획이다.❶

원리 객대경 기자



장애인근로자 고용안정 위한 적절한 관리 필요하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한 언택트 직무 개발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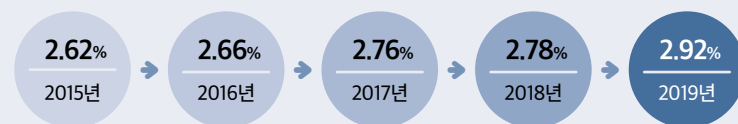
1991년부터 제도 운영...2019년 고용률 2.9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 30주년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도 함께 성장해 왔고, 그만큼 장애인 고용 효과도 매해 더할수록 거듭 향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 및 사회적 연대책임을 실천하고, 장애인 고용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1991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할당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추정 장애인구 수는 약 258만명이며, 2019년 말 기준 고용의무 사업체 2만9777개소의 장애인 고용률은 2.92%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현재 법정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은 민간기업 3.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3.4%로 장애인 고용에 보다 앞장서야 할 정부 및 공공부문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림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의 고용률 변화



고용의무비율
미달 시
명단공표 대상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5%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해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에 해당된다.

이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는 매년 1월 말과 7월 말까지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는 고용계획 및 상황보고서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의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나 기관, 국가 및 지자체는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연말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의 50%에 달하는 민간기업과 80%에 달하는 공공부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그 다음 해 대상이 된다.

명단공표 방법은 보도자료와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장애인 유관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게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명단공표로 인해 기관이나 기업은 장애인 고용이라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돼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 물론 연도 말 해당 고용의무 비율에 미달한다고 하여 곧바로 명단공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미달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5일까지 사전 예고를 하고, 명단공표 전까지 공단에서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를 실시해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3년 연속 명단공표 기업은 기관장 및 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여해야 하고, 그외 대상 기업은 인사담당자 2명 이상이 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한 사전 예고 대상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

계획을 제출하고 실제적인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현재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를 증빙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매년 11월 제외 신청 마감일 이전 기준 인원(민간부문 3.1%의 50%, 공공부문 3.4%의 80%)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완료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공단의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신청해 기업의 직무분석 등을 통한 고용 가능 (틈새) 직무를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거나, 고용의무 이행지도 기간 중 장애인 고용을 위해 맞춤형훈련이나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등 채용을 전제로 훈련 중인 경우도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기준 인원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공단에 구인 신청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 정원에 의무고용률(3.4%)의 70%를 곱한 인원 이상 충족하는 인원만큼 공무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명단공표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직접 고용 어려운
경우 연계고용제도
활용 가능

직접 고용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 대안으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4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명단

공표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대안으로 장애인 스포츠 선수 고용이 있다. 요즘은 장애인 스포츠 선수 고용을 통해 기업 홍보와 장애인 고용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업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만 해도 SK건설, 쿠팡 등 굵직굵직한 기업이 장애인 스포츠 선수를 각각 16명, 20명씩 고용해 장애인 스포츠 선수단을 창단한 바 있다. 스포츠 선수는 공단과 함께 장애인체육회에서 선수를 추천, 선수 조달에 큰 어려움 없이 고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고려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 인원을 모회사 인원으로 인정해 모회사의 고용률에 산정해 주고,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및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명단공표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근로자 수 10인 이상 및 상시근로자 수의 30% 이상 장애인 고용, 상시근로자 수의 15%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상시 100인 미만 기준, 100~300인 미만은 상시의 10%+5명, 300인 이상은 상시의 5%+20명), 편의시설 설치,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표준사업장 설립 자금으로 장애인 1인당 3000만원, 사업주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불가피한 경영악화로 인한 해당 기업의 폐업이나 소멸, 6개월 이상 휴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사전 예고 당시 상시근로자 수에 비해 1/2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명단공표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법정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장애인 고용에 선순환을 가져다준 것은 자명하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장애인 고용의무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이 2~3년마다 상향 조정되는 것과 깊이 연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현업에서는 기업이 앞다투어 장애인 구직자를 고용하는 광경이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획일적이고 편협한 생각으로 장애인 고용을 망설이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안타깝지만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장애인임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를 위한 기업의 치열한 장애인 고용 경쟁과 장애인 근로

자들이 이미 감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장애차별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 스스로 장애인임을 밝히기를 꺼려 하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적절한 관리와 현재 전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진정성 있는 시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지난 2018년 5월 시행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가 3년이 흘렀지만, 인식의 벽은 아직까지 두텁고 높게만 느껴진다. 당장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으니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인척이 막상 장애인이 되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장애인 당사자 입장으로 인식이 전환될 수밖에 없다. 그제서야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통계 상 후천성 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의 90%로,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각종 질병과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연재해, 환경오염 등에 의해 장애를 입게 된다. 즉, 어느 누구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서 배제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나 요즘 코로나19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는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해 담보해 주는 제도이다. 내가 장애인이 돼도 나에 대한 고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건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민간기업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의약 및 바이오, 헬스, IT, 유통업계 등 일부 산업분야를 제외한 전 업종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시기엔 신규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항공업계는 해외 비행길이 막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사업 규모 축소와 직원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직원의 절반이 유급휴직 중인 항공사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면 무급휴직이나 구조조정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한 고용의무 이행지도 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향후 지속될 수 있는 코로나19에 대비한 장애인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언택트 직무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또한 현행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비율 상향 조정(민간부문은 현행 3.1%에서 2022년 3.3%, 2024년 3.5%로, 공공부문은 현행 3.4%에서 2022년 3.6%, 2024년 3.8%로, 0.2%씩 상향 조정)을 위한 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기업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최근 해외 면역학 전문가의 ‘코로나19는 천연두처럼 백신으로 종식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비율 상향 시기의 적절성에 논란이 될 수도 있음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우리는 각자가 의미를 부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 공동체의 일원이자 같은 행복을 꿈꾸고 있다. 사회를 해석하는 시각을 바꾸면 행동도 바뀌지만,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공공의 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 한 사람 한 사람 내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 또한 허물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❶

글 맹경숙 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취업지원부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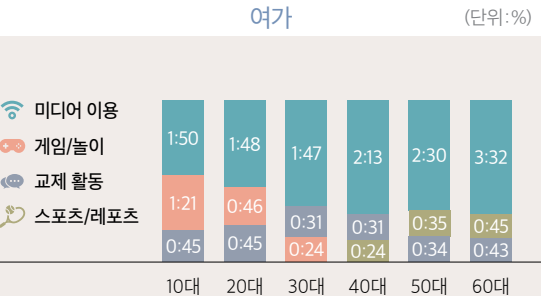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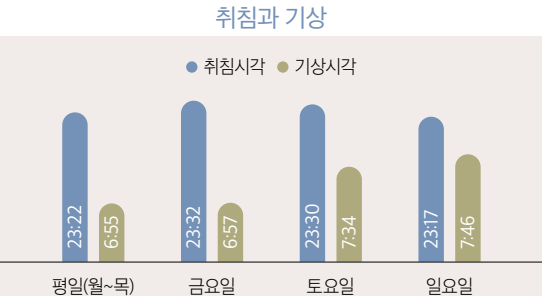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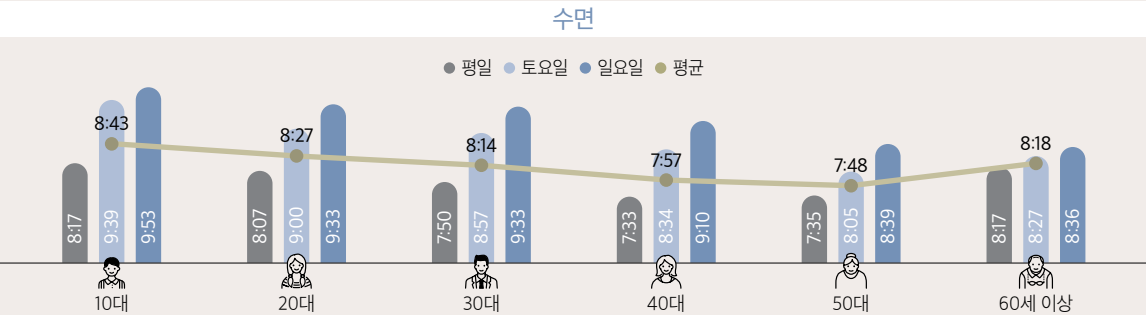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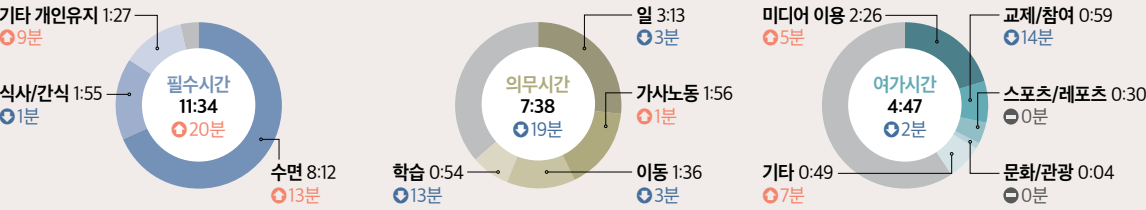
진정성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필요

시각을 바꾸면 행동도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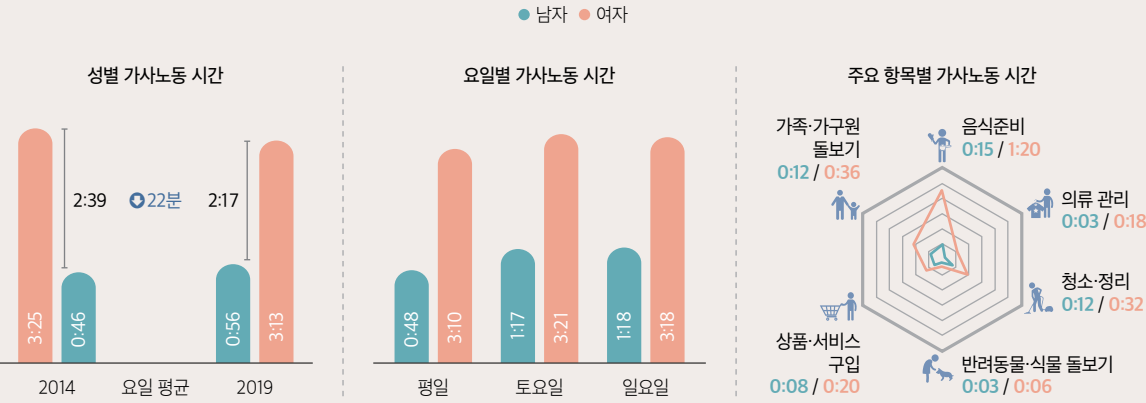
성인 남녀 가사노동시간 차이... 2시간 17분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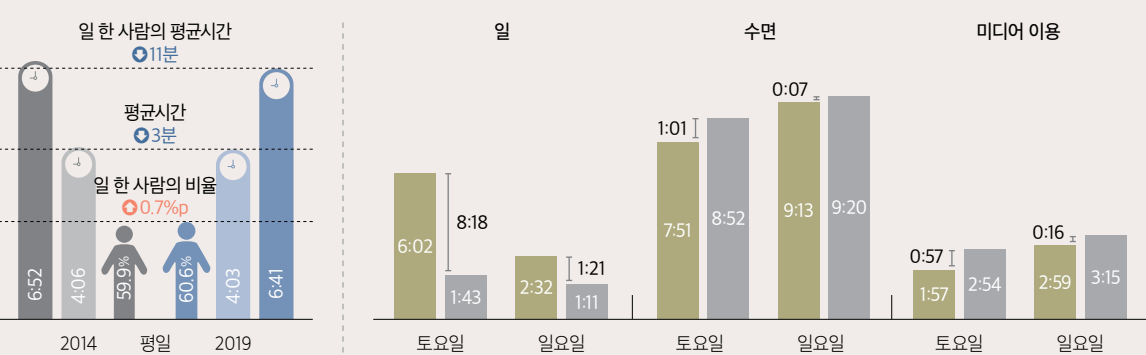
전 국민(10세 이상)의 시간사용 (시간:분) 하루 시간사용 (2014년 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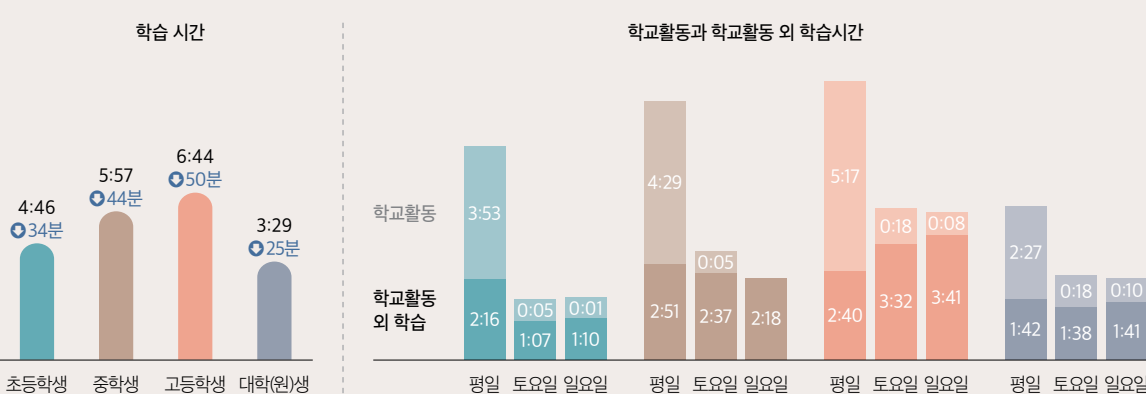
성인(19세 이상)의 시간사용 (시간:분) 가사노동 (2014년 대비 증감)



일(15세 이상) (2014년 대비 증감) 주 1일 휴무자, 주 2일 휴무자



학생의 시간사용 (시간:분) 학습 (2014년 대비 증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희생과 노력으로 집단 감염 위기 극복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사회복지종사자 덕분입니다



김서형 가톨릭요양센터 사회복지사는 “힘든 상황에서도 열정과 따뜻함으로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모든 사회복지종사자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진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고 헌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표현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는 의료진만큼이나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회복지종사자가 있다. 이들은 감염병 고위험시설에서 대상자와 동고동락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다.

지난 3월 지역 감염이 급증했을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복지시설이 자발적인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기도 했다. 가족과 떨어져 대상자와 함께 생활한 사회복지종사자의 희생과 노력으로 집단 감염이라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생활인이 의지할 곳은 시설과 종사자뿐...

코로나19 겪으며 책임감 더 커져

경북 영천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마야정신요양원. 이곳에서 입소자의 요양 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정근섭 사무국장(60세, 남)은 32년여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신을 절제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회복지를 전공했다는 정 사무국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사회복지종사자로서의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입소생활인의 면회, 외출, 외박이 제한되면서 이들이 믿고 의지할

곳이 시설과 직원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지원,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지난 3월에는 요양원의 거의 모든 직원이 가정을 뒤로하고 생활인들과 함께 요란하고도 힘든 2주간의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수십 년 복지 현장에 있었지만 시설에서 모두가 함께 생활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 사무국장은 “부족한 생활공간에서 숙소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텐트를 마련해 숙소를 만들기도 했다. 힘들고 두려웠지만 감염병 예방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견뎌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생활인들은 모든 내·외부 프로그램, 일상생활, 병원 진료, 가족 연계 등이 제한되자 정신적 긴장과 심리적 불안감이 고조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생활시설은 야간 프로그램이 없지만 격리 기간 동안 직원과 직원, 직원과 생활인 간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탁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정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순간은 ‘입소생활인이 아플 때’였다고 했다. 정신과적 혹은 신체적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응급 상황 시 코로나19 검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해서 치료가 늦어지기도 했다고.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종사자들은 격리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및 행정기관에 협조를 의뢰하는 등 입소자 건강을 위

66

힘들고 두려웠지만
감염병 예방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견뎌냈다.

정근섭 마야정신요양원 사무국장

99



해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정부와 지자체, 개인 및 기업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해 코호트 격리 기간을 감염자 없이 잘 이겨낼 수 있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마야정신요양원은 지금도 입소자 면회·외출·외박을 제한하며 체온 체크, 방역 활동 등을 매일 실시하고 종사자 야외 활동 자제를 통해 입소자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 사무국장은 “모든 사람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를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하면 좋겠다”며 “사회복지사가 행복하고 웃으면 우리 사회도 행복하고 웃을 수 있다고 한다. 조금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자”는 응원을 건넸다.

그는 앞으로도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열정으로 두루 베풀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참된 사회복지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휴원 및 폐쇄 상황에서도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 우선적으로 살피

김서형 사회복지사(31세, 남)는 2016년 대구 남구의 장기요양기관인 가톨릭요양센터에 입사했다. 4년 동안 입소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 복지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복지종사자로서 참담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요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은 대면 서비스가 가장 기본으로 요구되는 곳이어서 휴관이나 비상 운영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야 했고, 적절한 대응 방안과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찾기까지 모든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66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자
참담함을 느꼈다.
휴원 조치에도
어르신 건강을 살폈다.

김서형 가톨릭요양센터 사회복지사



99

기관에서는 모든 종사자의 위생 관리에 힘썼다.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시설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김 복지사도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타인과의 대면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의 활동이 잦은 시간대는 외출을 삼가는 등 보이지 않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대구는 코로나19 감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어서 더욱 어려움이 컸다고 한다.

그는 “시설 부근에서 일명 ‘슈퍼전파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며칠 동안 SNS를 통해 들썩이면서 타지에 있는 지인까지 걱정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수급자와 보호자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을 설득하는 등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쉬운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복지사는 센터가 휴원 및 폐쇄되던 당시 취약계층 수급자

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처방전 내용을 꼼꼼히 설명하고 적절한 시기에 약을 복용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장기요양기관 특성상 완전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비대면 서비스를 수급자 생활 속에 접목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김 복지사는 “사회복지사가 대단한 직업은 아닐지 몰라도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누구보다 최고이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사회복지사가 아닌 인간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아들과 손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속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는 힘든 상황에서도 열정과 따뜻함으로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모든 사회복지종사자를 응원한다. 쉽지 않겠지만 힘을 내 코로나19 위기를 잘 헤쳐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늘도 사회복지종사자는 코로나19와 싸우며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에 고마움과 존경을 전한다. 사회복지종사자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 ㉠

글 광대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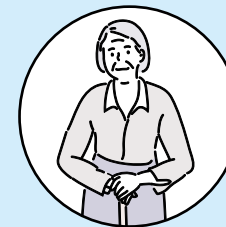


소외된 우리이웃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전화 한 통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발견하셨다면

☎ 1688-7934로 연락주세요!

찾아주세요!



나눔홍보대사
배우 안보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새로운 돌봄 방식의 출현

"혁신은 고객을 바라보는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것"



우리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속도도 더욱 가속화돼 가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 정도인 약 800만명인데, 10년 후인 2030년에는 고령인구가 1200만명, 전체 인구의 25%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야기되는 문제들의 우려 때문에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내놓고 실천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변화 양상 중 하나가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들의 병원 방문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고령의 환자가 혼자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항암 치료 등과 같이 좀 더 무거운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혼자 병원을 가는 것 자체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기도 한다. 물론 배우자나 가족들이 보호자로 함께 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가족들의 이러한 병원동행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환자

자신이나 보호자가 겪는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고 경제적인 손해까지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비응급 의료 동행(Non-Emergency-Medical-Transportation)이라고 불리는 ‘병원동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응급 상황에 처하지 않은 환자들이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동행인이 함께 의료기관에 방문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국가 주도의 복지서비스로 정착했으며, 국가 차원의 병원동행 전문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병원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느껴 몇 년 전부터 지자체 혹은 민간업체들이 함께 하기 시작했고 이 서비스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서비스로 확장하게 되었다.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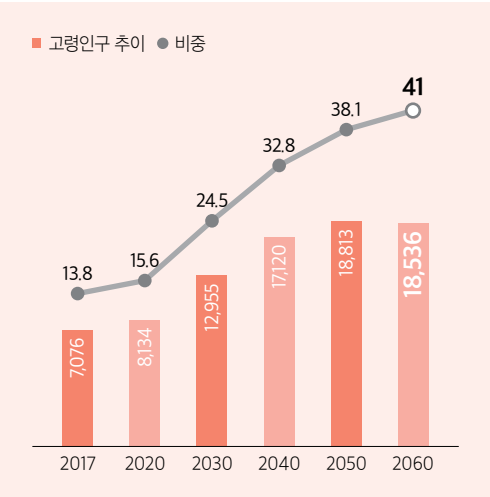
위드메이트의 병원동행서비스는 개인 고객이나 시설 및 기관의 고객이 위드메이트 웹이나 앱 플랫폼에서 신청하면 원하는 일자와 시간에 위드메이트 소속의 전문 동행인이 방문해 자택에서 병원까지 동행, 진료 수속, 진료 대기, 진료, 계산, 약 수령, 그리고 자택 복귀까지 함께한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보호자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서비스 종료 후에는 진료 결과, 검진 비용, 다음 진료 예약일 등의 정보가 담긴 결과보고까지 제공한다.

위드메이트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주도하는 복지사업에 참여해 병원동행 사업에 대한 고도화를 이루었고, 지자체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동행 인력을 보유하게 됐으며, 현재에도 서비스 내용과 전문 동행인의 수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중이다.

“환자들이 병원 이용 시 본인의 건강만 생각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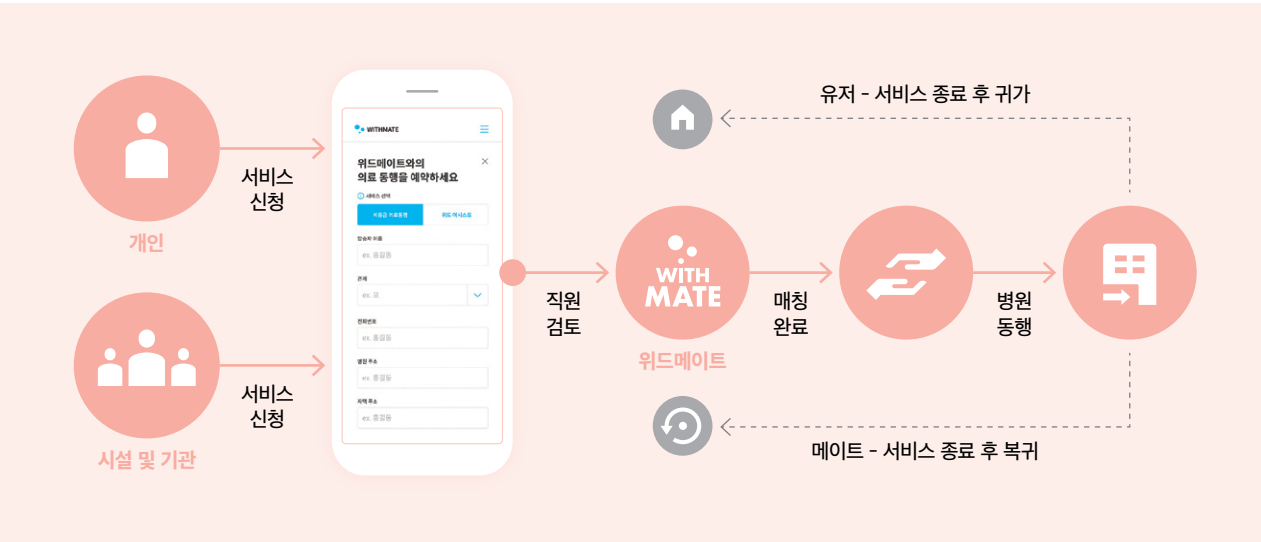
일반적인 사회서비스의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실현하고 있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활동의 두 번째 사례는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위드메이트’다. 위드메이트는 병원동행서비스를 국내에서 초창기부터 시작했으며, 현재 3500여 명

그림1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 및 비중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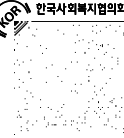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2 위드메이트 서비스 이용도



자료 | 위드메이트 소개자료



66

새로운 혁신을 찾고 있다면 고객 대상을 다변화하고
그들의 니즈도 충족시켜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99

지의 건강은 회복했지만 지 대표의 일상에 큰
지장을 받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
에서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높은 질은 기본으
로 하고 더불어 환자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
면서 그동안 소외 아닌 소외를 당한 보호자의
어려움까지 해결하고자 본 사업을 설계했다고
한다.

흔히 복지나 사회서비스는 직접적인 수혜대
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것이 가장 기본이기
도 하다. 하지만 위드메이트처럼 직접적인 수혜
대상과 함께 그 보호자의 어려움까지 생각하면
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은 많지 않았다.

새로운 혁신을 찾고 있다면 고객 대상을 다변
화하고 그들의 니즈도 충족시켜주는 새로운 형
태의 사회서비스 혁신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
은 방법일 것이다. 보호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면 위드메
이트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해
결하는 것에 초점을 둔 서비스가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❶

글 신철호 상상우리 대표

“보호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서비스”

위드메이트가 1차 고객인 동행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와 함께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환자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서비스이다. 환자 동행부터 시작해서 진료 과정 중에도 30
분마다 진행되는 상황을 보호자와 공유하고, 서비스가 끝난 이
후에도 자세한 결과보고를 하고 있으며 보호자들에게 매우 큰
신뢰를 받는 핵심 서비스 중 하나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세심한 서비스는 대표자가 창업하기 전에 느꼈던 환
자 보호자였을 때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 위드메이트
지승배 대표의 아버지가 전신 근육과 관련된 희귀 질환에 걸
렸을 때 지 대표가 직접 8년간 간병을 했고 이 과정에서 아버

그림 3 위드메이트 혁신 모델



기업퇴직자 사회공헌 뉴스타트

기업 퇴직(예정)자들이 일정 교육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로 진출하거나 경험하도록 지원합니다.

신중년의 전문성을 기반한 마인드셋 교육, 실무역량 교육,
현장실습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로
새로운 커리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참여기업은 사회공헌의 기회
- 사회서비스 기관은 새로운 성장 기회
- 기업 퇴직(예정)자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경험

사업명칭 · 기업 퇴직(예정)자 사회공헌 일자리 연계 지원

사업특징 · 사회공헌(CSR) 차원의 일자리 사업 참여 의지가 높은 공공기관 및 기업에
자사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연계 지원

참여대상 · 기업 퇴직(예정)자의 사회서비스 분야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원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
※ 자사 퇴직(예정)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를 위한 일정 운영비 등 지원

모집기간 · 2020년 6월 ~ 2020년 12월

지원내용 · 교육 기수 당 30명 내외의 선발 운영
· 온라인 및 현장 교육과 실습 제공
· 사회서비스 기관 현장 체험 및 해당 분야 취업 연계
· 인생 2막을 위한 자기 진단 및 구직 역량 강화
· 창업 및 창직 활동 지원 ※ 교육비 일체 무료

참여문의 · (주)상상우리 커리어콘텐츠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30층
T : 02-6388-7750
E : kimdh@sangsangwoori.com
W : sangsangwoori.com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E : crc@ssnkorea.or.kr
W : crckorea.kr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시설탐방

명도자립센터, 중증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근로장애인이 즐겁고 행복한 일터 만들겠다”

글 박대경 기자

전남 목포시에 자리한 명도자립센터는 사회 복지법인 성골롬반복지재단(대표이사 제라딘 라이안 수녀)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다. 중증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명도자립센터는 1999년 목포시 산정동에서 ‘명도복지관 보호작업장’으로 시작했다. 이듬해 보호작업시설인 ‘명도자립센터’로 시설 신고를 한 뒤 목포시 옥암동으로 이전했고 2017년 다시 목포시 대양동으로 신축 이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명도자립센터 전경

근로장애인 14명, 훈련장애인 22명 등 총 36명의 중증장애인이 시설을 이용 중이며, 8명의 종사자가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 장애인은 대부분 지적장애가 있어 센터는 이들의 전인적인 재활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직업적응훈련으로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 태도 및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자원활용훈련으로 마트·식당·미용실·영화관 등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타인 의존도를 줄이고 스스로 생활습관을 익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권교육, 성교육, 안전교육, 대인관계 기술 등 문제해결훈련을 실시해 올바른 상호 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술 습득을 돕고 있으며, 직무기능향상훈련으로 제과제빵, 우편

발송 대행, 임가공 등의 기능공과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작업수행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신체 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2006년부터 쌀로 만든 건강한 빵 생산

명도자립센터는 직무기능향상과 직업적응능력향상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직업재활 매뉴얼에 충실하고자 노력한다. 근로인과 훈련인의 직무 내용을 구분해 개인별 능력에 맞게 기능공과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과제를 개발·유지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의 관계 형성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직업적응훈련이나 지역사회자원활용훈련과 같이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트·음식점 등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할 때는 3~4명의 소그룹으로 진행하고 매년 욕구조사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파악한다. 이러한 프



올해 새롭게 시작한 우편 발송 대행 업무

로그램 참여는 매일 반복적인 작업 활동에 치진 장애인들에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활력소가 되고 있다.

명도자립센터는 2006년 근로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제과제빵 사업을 시작했다. 쌀로 만든 빵을 판매하며 꾸준히 성장 중인데, 지난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아 이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 있다.

올해는 신규 수익사업으로 우편 발송 대행을 시작했다. 전라남도청·전라남도교육청과 계약을 맺고 정기간



명도자립센터는 수익사업으로 쌀로 만든 빵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행물 발송작업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작업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DM 장비를 구매해 생산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사회 장애인의 ‘희망 일터’ 될 것

명도자립센터는 지역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자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하고 있다. 근로장애인을 고용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서비스 대상의 욕구와 목표를 파악해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근로장애인을 고용하고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수익사업 성장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 생산품인 쌀로 만든 제과제빵이 지역특산품이나 장애인생산품을 대표할 수 있도록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우편 발송 대행 업무도 현재는 1년 사업으로 내년을 기약할 수 없어 신규 거래처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명도자립센터의 목표는 ‘근로장애인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진정성 있는 복지를 실천하며 지역사회 장애인의 ‘희망 일터’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갈 계획이다. ㉠



명도자립센터는 근로장애인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는 '사회복지사'다

취약환자와 지역사회 주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포스트 코로나에도 의료사회복지사의 삶은 계속된다

글 배주경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사



나는 11년차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다. 2년 전 사회복지사가 한 명 더 충원되기 전까지 나 홀로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환자 상담과 자원봉사자 관리 등 원내 업무와 대외적인 활동으로 정신없이 살아왔다.

올해 설 연휴부터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환자가 간간히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자원봉사자들을 못 보게 될지는 몰랐다.

2월 중순 대구에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하고 신천지교인을 중심으로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는 나의 일상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다.

매일 뉴스를 통해 발표되는 코로나19 확진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일상이 됐다. 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응급실이 한때 폐쇄되고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들이 격리됐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적절하게 치료 받을 수 있었던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마음이 무거웠다.

전국각지에서 응원과 후원...큰 위로에 감사

매일 병원에 출근해 환자 상담 등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을 했고 다른 직원들과의 대면도 줄이고 조심스럽게 생활했다. 혹시 나로 인해 병원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행동하는데 조심스러움이 컸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병원에 속속 입원했고 일반 진료를 보는 환자 수는 이전보다 극히 줄어들면서 사회사업실을 찾아오는 환자 수도 감소했다. 원내 프로그램 등을 전면 취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병원에서 상담과 지원 업무는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이전 숨차도록 일하다가 활동이 제한되니 불안하고 위축되기도 했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받는 소아암 환자 어머니들이 의료진에게 손 편지를 적어 격려해주고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직원들과 교대로 병원 로비에서 내원객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안내 업무를 새롭게 시작했다. 선별진료소와 응급실 등에서 코로나19로 고군분투하는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전국각지 각계각층에서 응원 메시지와 후원 물품이 밀려들었다. 내가 소속된 부서는 매일 쌓이는 후원 물품을 배부하는 업무를 맡았고, 부서원들과 함께 물품을 옮기고 의료진에게 배부했다.

소아혈액종양내과에서 치료 받는 소아암 환자 어머니들도 의료진에게 수고한다는 손 편지를 적어 격려해주고 힘든 시기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며 물품을 후원하는 등 많은 분들이 사랑과 정성을 보내줬다. 감동이었고 감사했다. 큰 위로와 정성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내가 만나는 환자는 대부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독거

노인 등이어서 비대면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시국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나 어려움을 나누고 관할 공공기관이나 민간재단의 자원을 연계해 병원 치료를 잘 받고 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하도록 도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자활센터에서 간병사업이 중단됐고, 지역 보건소와 행정복지센터가 선별진료소 및 긴급재난지원 업무로 바빠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모든 사람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확진과 동시에 갑작스런 입원과 격리치료로 인해 입원에 필요한 물품 공급이 어려웠고, 특히 중증 환자와 보호자가 없는 요양병원 환자의 입원이 많아 병동에서는 치료의 어려움이 있었다.

3월 초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로나19

확진환자 지원 프로젝트를 안내받아 대구경북 코로나지정 입원병원에서 신청하도록 지역 의료사회복지사들에게 홍보했다. 우리병원도 사업을 신청해 물품을 지원받아 코로나 입원병동에 전달했다. 병동수간호사는 코로나 입원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 고맙다고 했다.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하기 힘든 시기에 한국소아암재단 등 민간기관에서 소아암 등 입원환자를 위한 물품을 후원해주어 환자들을 지원했다. 코로나19로 힘든 환우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던 프로그램 중 하나를 올해는 원예작품 전시회로 전환, 2주간 병원에서 전시회를 실시해 내원객과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겠지만 지역감염이 잠잠해지고 확진환자가 확연히 줄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대규모로 늘고 있어 올해 3,4월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코로나 시대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사회복지사로서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화해 모든 사람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병원 취약환자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애쓰는 모든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을 응원한다. ❶



배주경 사회복지사는 전국각지 각계각층에서 의료진과 직원을 위한 후원물품과 응원을 보내와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힘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글 김철우 서울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강서구 등촌3동장)

복지와 재원은 불가분의 관계…적정선이 중요

어느 어르신의 불평, 세금과 복지

얼마 전에 어르신 한 분이 재산세 고지서를 들고 사무실로 찾아왔다.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몇 만원이 더 나왔다면서 소득이 없는 늙은이에게 왜 세금을 자꾸 올리느냐고 따지며 물었다. 내가 벌고 모은 재산으로 노후 준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도와주지 못할망정 뭘 더 빼앗아 가느냐는 것이다. 만약 해결이 안 되면 민원을 넣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르신의 형편을 자초지종 들어보니 수입은 국민연금과 주택 역모기지를 신청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그런데 갈수록 세금과 물가가 오르면서 더는 생활비를 줄일 곳이 없다고 했다. 자식들은 자기 가정 책임지기도 힘들어 전혀 도움 주지 못하고 있으며, 몇 년 전 아내마저도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살아가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밥과 빨래할 힘조차 없어 가사도 버겁다고 했다.

생길 수 있는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계속 생활비가 늘어나고 질병으로 치료도 받아야 하며 경조사까지 있을 때는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했다. 어르신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어르신이 이와 비슷하게 살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50여만원과 자식들이 매월 보내드리는

생활비로 살고 계신다. 어머니는 2년 전부터 치매 증상으로 장기요양 4등급을 받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만약 요양보호제도가 없었다면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고 오든지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모셔야 할 처지에 있었다. 다행히도 요양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어서 부모님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는지 모른다.

복지사업 확대…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지면서 복지 욕구가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넓어지고 차츰 전 국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저소득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기준도 올랐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삶이 향상됨은 물론 장애인, 어르신들의 복지도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

2020년도 우리나라 보건복지 고용 분야 예산이 182조원이며 국가 전체 예산 중 35.2%를 차지한다. 2010년에는 81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27.8%를 차지했는데 불과 10년 만에 100조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은 매우

66

복지와 재원은 불가분의 관계이기에

적정선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력과 복지 수준의 균형을 조화롭게 맞춰가야 한다.

99

놀라울 만하다. 10여 년 사이에 기초연금, 학교 무료급식, 무상교육 확대 등 보편적 복지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그물망처럼 촘촘히 만들어져 가고 있다. 얼마 전에 복지사업이 300여 개가 넘는다고 하는 자료를 본 적도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 국민에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지방정부에서도 긴급생활비가 지원되기도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함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소득 재분배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복지 측면도 있을 것이다.

시장 기능에 의한 소득 분배는 대부분 불평등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 세금과 복지 급여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소득을 다시 분배하는 것이 소득 재분배이다.

예를 들어, 고소득층에게는 세금 부담을 키우고 저소득층에게는 세금

의 부담을 줄여주는 누진적인 조세 정책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기 위한 정책이다. 이와 같은 조세 제도뿐 아니라 사회 보험, 공공 부조 등이 소득 재분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소득 재분배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에는 예산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이 낸 세금과 보험료라는 재원이 확보돼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며 세금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복지 확대는 증세를 요구한다. 선진 복지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 복지국가의 유지 비용을 감당하려면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수입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국가도 있으니 말이다.

경제력과 복지 수준의 균형 맞춰가야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 보유세가 올랐다. 세금 부담이 부쩍 커지면서 가계와 기업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세금 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도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세금을 추가 인상해 선진 복지국가를 향해 나가자고 말하기도 하지만 위와 같이 세금 인상이 본인 부담의 현실이 되면 조세저항도 생긴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국가의 복지제도와는 차이가 있지만, 간혹 주변에서 복지병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오면서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보이기도 한다. 하나의 복지 욕구가 해결되면 다음 욕구가 기다리고 다음 욕구를 충족하면 또 다른 요구가 있으며, 예산 투입 대비 나아지는 것이 미미하기에 복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기도 한다.

이처럼 복지 확대와 세금 부담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예민한 사항이며 복지와 재원은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에 적정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복지 수준의 균형을 조화롭게 맞춰가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며칠 전부터 2차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과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일부를 선별 지급하자는 의견뿐만 아니라 재원 조달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어찌 됐든 간에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이 잘 처리될 것이라 보지만…: 오늘은 얼마 전에 어르신이 찾아와서 하신 말이 생각나는 하루다. ㉠

21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말해 달라.

“당선의 기쁨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7개월여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민들의 삶이 매우 어렵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정책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한시도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제반 정책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서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미래통합당의 유일한
보건의료전문가인 서정숙 의원은
“머지않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제약바이오와
의료기기 등 미래 먹거리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유일한 보건의료전문가로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활동계획과 각오는?**

“국회 임기가 개시된 직후인 6월 1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서,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 산하 질병관리처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국가방역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민생을 의정 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두되,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담보하는 보건의료정책, 민생을 보살피는 생산적이고 선순환적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입법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국민 속의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당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실천하는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마중물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응 방안은?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Back to the Basic)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비단 경영 위기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으로써 기본과 원칙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코로나19 대응은 9월 중 출범 예정인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방역 전문가들이 지침을 내리고 통제하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 의료진의 헌신과 협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화합과 신뢰의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것 못지않게, 궁극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종식시킬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과 여건 조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관심 있는 보건복지 분야와 추진계획은?

“코로나19 관련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염 및 질병관리 컨트롤타워로서 독립된 정부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향후 5년 주기로 발생할지 모르는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방역 중심 컨트롤타워가 그만큼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6월에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체제에서 독립해 국무총리 산하 ‘질병관리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당선 전부터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기대수명이 82.7세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앞으로 5년 뒤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노인을 위한 의료보조용품 등에 막대한 의료비가 지출되는 등 천문학적인 의료비용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원 이전에 오랫동안 약국을 경영했고, 약사회 활동과 여성계 활동도 활발하게 해왔다.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돌보는 ‘사회 약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근본 이유도 결국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서민층부터 부유층까지 다양하게 그리고 아픔을 가진 지역주민을 상대로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소통하게 되면 공정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게 되고, 또 이렇게 생생한 공정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과의 새로운 소통과 나눔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경험했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 민의의 전당에 입성하고서도, ‘소통’과 ‘공정’의 가치는 의정 활동을 통해 꾸준히 실천할 기본적 덕목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인생의 좌우명이나 철학이 있으시다면?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매우 존경한다. 그분의 ‘무실역행(일을 참되고 실속이 있도록 힘써 실행함)’ 사상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매사에 실천의 힘을 믿고 현실에서 실현해 나가려고 노력한다. 그동안 크고 작은 단체의 리더 역할을 감당했고, 개인적인 삶도 일부 희생해야 했으며, 때로는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나 자신의 시간도 부족했지만, 묵묵히 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의 성원과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 덕분이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상해에서 한 연설 중 ‘너희 중에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네가 나서라’라는 말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좌우명으로 삼아 실천하고 있다.”

진정한 복지란 무엇이며 실천 방안은?

“진정한 복지는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복지정책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포퓰리즘과는 엄격하게 구별돼야 한다.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도입한 의료보험제도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그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의료보험



정책을 전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능했다. 그 이후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본격적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의료시설을 비롯한 제약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며 결국, 이것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다. 복지정책의 성공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느냐가 아니다. 무조건 국민 세금을 늘려 나누어주는 공급자 위주의 방식보다는 국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투자자의 개념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내일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는 ‘사회안전망’이라는 기존의 복지국가 프레임 자체를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수명을 다해 가는 상황에서 진보의 어젠다로 취급받았던 ‘기본소득’문제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복지의 따뜻한 온기가 대한민국 구석구석 닿지 않는 곳 없이, 모든 국민이 복지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도록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분을 다하겠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안전과 함께 복지를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엄마 손은 약손’처럼 따뜻한 손길로써 국민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를 불어넣는 ‘따뜻한 정치’를 실천하고 싶다. 나, 사회 약사이자 국회의원 서정숙은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꾼다. ‘전인건강’이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것을 의미하는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균형 잡힌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전인건강해질 때, 국민들의 응축된 힘으로 대한민국은 더 건강한 사회로 발돋움하리라 확신한다. 국회의원의 위치에서도 여야가 생산적인 갈등과 합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를 건강하게’, ‘대한민국도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차근차근 실천해 나갈 것이다.”



현장 복지종사자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현장 경험을 통해, 복지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특히, 전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언택트(비대면)가 일반화된 실정에서, 콘택트가 핵심인 현장복지 지원활동은 종전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늘 감사의 마음은 갖고 있지만, 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녹록지 않은 현실에 죄송스럽고 답답함을 느낀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은 곧 사회복지 전문성인 복지서비스의 질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 복지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심리적 지원체계도 갖추는 등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하고 입법적으로 보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로나19에 대한 K-방역, 모범 방역국의 위상은 보건 의료진의 헌신과 방역 당국, 누구보다도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내심 덕분에 가능했다. 이 자리를 빌려,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저력으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방역의 힘을 보여준 국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우리 국민들은 활발하게 소통하고 공감과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이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 또한, 코로나 방역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에 적극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  **글 김영아 편집장 사진 고인순**

* 본 기사는 당명 개정 이전(9월 1일 발행)에 취재 및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복지 선도하는 협회 되도록 최선 다할 것”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지난 7월 20일 제10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으로 선출된 김양희 신임회장. 코로나19로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는 유권자 606명이 투표에 참여, 88.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협회 위상 재정립 △소통과 협치로 회원의 권익향상 제고 △노인복지법 개정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전국 조직망 및 전달체계 구축 등을 주요 핵심과제로 내놓은 김양희 회장을 만났다. 그의 임기는 오는 2023년 2월까지다.

먼저 취임소감을 말해 달라.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전국 각 지역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755개 회원 기관에서 부족한 저를 제10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으로 뽑아주신 데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협

회를 발전시켜달라는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6만여 취약계층 재가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예방적 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 시 가장 강조한 부분이 있다면?

“최근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재가노인복지가 우리나라 노인복지를 선도해야 함을 재차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재가노인복지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협회 회원 간의 소통과 협치를 통한 위상 정립, 지역별로 차이가 현저한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노력, 전국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공통으로 활용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했다. 이 모든 것이 단번에 이뤄질 수는 없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임기 내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6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사업의 연계 및 확대를 통한

재가노인돌봄기관으로서의 통합 운영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99

현재 협회의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사업의 연계 및 확대를 통한 재가노인돌봄기관으로서의 통합 운영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37%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보다는 많은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지역노인에 대한 근거리 맞춤형 노인돌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외부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예방적 복지의 정책 수립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내부적으로는 협회의 많은 회원들이 참여와 헌신,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3개 위원회와 6개 사업분과를 신설 또는 개편 운영하고, 각 지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현안에 대하여 중앙 협회와 지회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해부터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커뮤니티케어와 재가노인복지를 따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한 성과와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말해 달라.

“현재 협회는 전국 16개 지회가 지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재가노인을 돌봐드리는 재가노인지원사업을 비롯한 노인맞춤돌봄,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재가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와 재가노인복지를 따로 생각할 수 없듯이 재가노인복지는 그 지역사회 안에서 30여 년 전부터 협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커뮤니티케어와는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방적 복지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사회적 비용 부담과 돌봄 인력의 고통을 경감시키는데도 주력해왔다. 물론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추진 내용에는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 가운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지역사회의 예방적 노인복지체계와 장기요양의 중심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한 서비스 변화나 협회 차원에서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 찾아가 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삶의 고단함이 있는 어르신을 직접 찾아뵙고 정서적 유대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봐드리던 역할에서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는, 그동안 주된 사회복지실천이 아니었던 만큼 적잖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협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어르신의 심리적 안녕을 위한 시설의 서비스제공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다만, 보다는 많은 사회복지관련단체, 학계 등에서 비대면 사회복지실천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야간보호시설 운영의 어려움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감염병으로 인해 주야간보호 이용 어르신이 감소돼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주야간보호시설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각 시설에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교육과 필요한 지원 등을 통해 재가노인 개인의 안전은 물론 시설환경의 방역 등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협회의 향후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으로 노인의 삶의 여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예견되고 있다. 이에 예방적 복지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협회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확대 방안 및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재가노인에 대한 예방적 복지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대구형 재가노인돌봄센터는 전국적인 재가노인지원시설 통합모델로서 수행인력 5명이 재가노인 200명을

돌보고,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인력 32~40명이 대상노인 500여 명의 돌봄을 전담하고 있다.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로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직률을 최소화해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협회는 이러한 통합모델을 참고해 지자체 상황에 맞는 재가노인돌봄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계에 당부의 한 말씀을 바란다.

“감히 사회복지계에 당부하기 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협업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 소견을 말하고 싶다. 사회복지지는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에 클라이언트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유형이나 대상 등을 초월해 전인적이고 다각적이며 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노인복지의 심각성과 필요성이 더해지고는 있지만 그 속에도 장애인, 빈곤노인 등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계가 상호 협력하여 각 분야별 복지가 한층 더 발전되고, 또 분야를 뛰어넘는 협력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상생하기를 바란다. ㉠

글 이경하 기자

인물

“장애자녀들이 사회 안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장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체계 부재 △발달장애인의 성 인식 제고 △중증·고령장애인의 종합적인 돌봄법 제정 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월 9일 한국장애인부모회 제13대 중앙회장으로 취임한 고선순 회장은 △적극적인 소통 △정책개발 △재정적 자립과 조직확대 등 3가지 공약을 강조하며 “한국장애인부모회 후원회와 연계한 사업개발 추진으로 후원조직을 확대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부모회가 설립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장애인부모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바란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1983년 11월 3명의 장애인 어머님들의 활동을 시작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특수학교 부모회장들이 1984년 10월 부모회조직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여러 차례 회합을 통해 1985년 2월 26일 약 200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가지면서 설립됐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전국에 총 99개의 지회·지부가 설

치돼 전국 각지에서 200여 개의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회는 ‘사회를 주도하는 장애인 가족’, ‘목적 및 실천에 기반한 정책수립과 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확대’라는 모토와 미션으로 장애인 부모들의 염원인 ‘장애인가족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법 제·개정, 정책개발 및 각종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전국의 많은 지방부모회와 유대를 강화해 지방부모회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월 한국장애인부모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취임 후 부모회 중앙회장으로서 공약을 하나씩 실천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갑작스런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현재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누구보다도 장애인가족들의 고충은 더할 것이다. 우리 장애자녀들은 기저질환을 논하기 전에 장애만으로도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코로나19라는 상황까지 더해져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이에 취임 소감이라기 보다 모두가 혼란스러운 시기로 힘들지만 우선, 중앙회장으로 전국의 장애인부모들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장애인가정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 부모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과제들을 하나씩 수행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취임 당시 강조한 공약이 있다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적극적인 소통이다. 조직 내부적으로 중앙회와 지방부모회가 서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가족 복지국가를 이룩하는데 한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둘째, 정책개발이다. 장애인 고령화 정책 체계화, 발달장애인 성(性) 연구 및 정책 반영, 장애인가족 지원체계 구축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셋째, 재정적 자립과 조직 확대이다. 한국장애인부모회 후원회와 연계한 사업개발을 통해 후원조직을 확대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부모회가 설립되지 않은 지역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 부모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지?

“현 시국에서는 장애인가정의 안전이 최우선일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코로나19로 2020년 추진사업이나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각종 사업내용 변경은 물론, 정책 제안을 위한 세미나 등의 개최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전 국민이 노력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계획한 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현재 부모회에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간략한 설명과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법원으로부터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특정한 사무 처리나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후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이다. 부모회는 2016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으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공공후견 서비스 직접제공,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공공 후견인 지원 및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올해는 17개 시도 지역담당자 인건비 치우개선과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를 통해 피후견인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코로나19 정국 속 부모회 중앙회, 지회·지부 등 지역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부모회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회원 중 상당수가 학령기 장애자녀보다 성인기 장애자녀를 더 많이 두고 있다. 성인기 장애자녀의 경우에는 더더욱 갈 곳이 없어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많은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복지관, 보호작업장, 주·단기보호 시설 등에서 장기간 휴관이 지속되어 장애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 이에 부모회에서는 장애인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후원받아 전국의 지방부모회에 배포하고, 지방부모회에서는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긴급돌봄서비스 운영, 비대면 가정교육, 감염병 교육, 방역지원, 물품전달 등에 힘쓰면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있다.”

현재의 복지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부모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 고령장애인 지원체계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로 2017년 고령사회 진입,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를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장애인의 증가 속도는 더욱 빠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빠르게 조기 노화를 경험하고, 조기 질병 발견의 어려움에 따른 2차 장애노출, 고령으로 인한 돌봄제공자의 고강도 돌봄부담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야기된다. 이에 현실을 고려한 고령장애인 연령 규정, 고령발달장애인과 돌봄 제공자에게 노출된 문제와 욕구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종합계획과 서비스 가이드라인 수립이 시급할 것이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성 인식 제고이다. 최근 성과 관련된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 관련 사건도 자주 언론에 노출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부재는 물론, 발달장애인의 성에 관한 편협한 선입견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성 연구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한 성적 권리의 향유 및 지원 가능한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중증·고령장애인의 종합적인 돌봄법 제정이다.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해 발달장애인법 등 장애인 관련 지원법이 다수 제정되고,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선도사업을

66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장애인가정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 부모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를 하나씩 수행해나가겠다.

99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장애인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나 중증 고령장애 자녀를 둔 부모도 고령이 되어 ‘두 세대 고령 요보호대상자’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돌봄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의 원조인 영국의 제도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돌봄법 제정을 통해 중증·고령장애인과 가족의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부모회에서는 세 가지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

“전국의 장애인가족을 대표하는 중앙회로서 지방부모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우리 장애자녀들이 이 사회 안에서 함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가족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그날을 기약하고자 한다. 이에 부모회의 목적 및 실천에 기반한 정책수립과 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확대를 위해 다음 다섯 가지 목표를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고령장애인과 그 돌봄제공자를 위한 정책개발이다. 둘째, 발달장애인 성 인식 제고 및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다. 셋째, 장애인 365쉼터 전국 설치 추진이다. 넷째, 장애인육구조사에 의한 지원체계 수립과 사업매뉴얼 체계화다. 마지막으로 성년후견제도와 발달장애인법의 현실 반영을 통한 개선이다.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글 이성우 기자

코로나19와 호주 자선기관의 지속가능성



호주 자선기관 수는
약 5만7000개로, 고용된 직원만
1300만명에 달하지만
78%의 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수입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선기관
지속가능성 위기는 지역사회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클 백영남 호주 퀸즐랜드 공과대학교
사회복지사



호주의 자선기관은 지역사회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018년 호주 자선·비영리기관 위원회(ACNC)에 등록된 기관 수는 5만7000개 이상이며, 이곳에 고용된 직원은 1300만명으로, 호주 전체 고용인 10명중 1명 이상에 해당된다. 또한, 호주 국민 7명 중 1명은 자선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선기관의 연간 예산은 1550억 달러로 호주 국내 총생산량(GDP)의 8%를 초과한다.

자선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교육, 보건, 스포츠, 여가, 노인 요양, 종교, 예술, 문화, 동물보호 그리고 환경보호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이는 자선기관이 호주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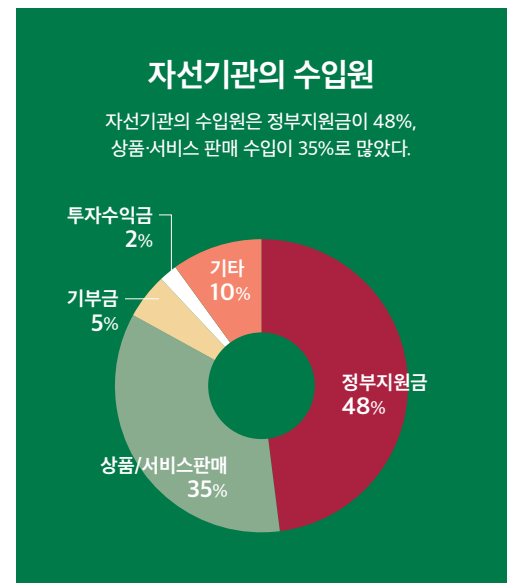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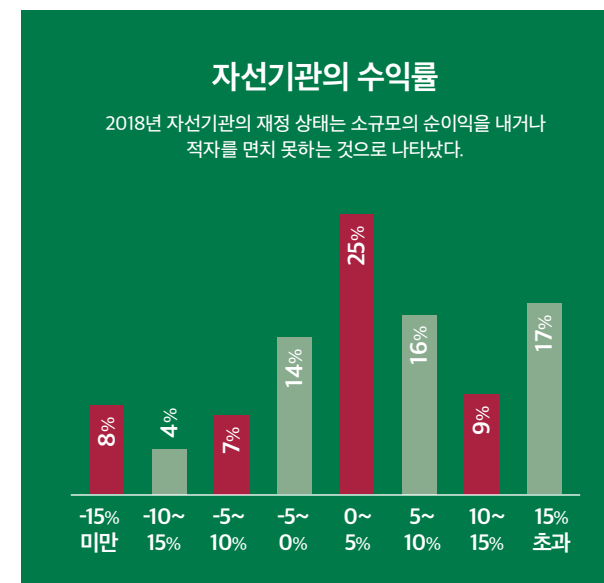
2020년 발간된 코르티스(Cortis)와 블랙스랜드(Blaxland)의 보고서에 따르면 클라이언트가 자선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둘째, 주택 값 및 임대료 상승과 노숙문제 그리고 셋째, 부족한 정부 임금 보조금이다. 또한 자선기관 종사자 중 80%는 클라이언트가 점점 더 복잡한 어려움을 겪고, 이들의 빈곤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의 위기가 지속되고, 경제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현 시기에서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욕구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선기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호주 자선·비영리기관 위원회의 2018년 호주 자선기관 보고서(ACNC, 2020)에 따르면 기관 예산의 55%는 직원 임금이 차지한다. 자선기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고용된 직원을 유지하고, 자원봉사를 지원하며,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선기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기관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선기관이 경제적 충격에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2020년 6월 소셜벤처 오스트레일리아와 소셜임팩트센터는 1만6000개 자선기관의 재정상태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자선기관의 재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예측 보고서’를 내놓았다.

아래 그림은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전인 2018년 자선기



관의 재정 상태를 나타낸다. 자선기관의 67%는 순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25%는 연간 순이익이 5% 미만으로 그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다. 반대로, 33%의 기관은 연간 순이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적자 상태를 겪고 있었다. 소규모의 순이익을 내거나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관은 전체의 58%에 해당하는데, 이들의 재정상태가 위태로운 상황임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기관의 경우 경제 위기를 경험할 때 기관의 지속가능성은 낮아진다고 예측됐다.

위의 그림은 자선기관의 수입원을 나타낸다. 자선기관 수입의 48%는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인데, 여기에는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기관의 지원금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기관이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수입의 35%는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한 수익금이고, 5%는 기부금, 그리고 2%는 투자 수익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자선기관 재정에 미친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가 자선기관 재정에 미친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아직 어렵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많은 서비스와 이벤트가 취소됐고, 한정된 자원으로 기존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원봉사자 수가 급격히 줄고, 감소된 수입으로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선기관은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 4월 말 기준, 170개의 자선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2020), 85%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기관의 서비스 전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78%는 수입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응답기관의 19%는 수익이 15~30% 감소했고, 18%는 30% 이상 감소했다고 답했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경우, 수익이 평균적으로 51%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러한 추세는 자선기관이 기존의 클라이언트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새로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유동 자금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

기부금은 자선기관의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이다. 2020년 아우어 커뮤니티(Our Community)에서 350개 자선기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관의 67%는 기부금이 크게 감소했다고 보고했고, 15%는 앞으로 기부금이 더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분석가인 맥러드(McLeod)는 2020년 내 기부금은 7.1% 감소하고, 2021년에는 11.9% 더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자선기관들은 정보제공, 위탁서비스, 식량지원, 임시주택, 노숙자 지원, 정신건강, 재정상담 등의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욕구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했다. 문제는 많은 자선기관의 수익이 줄

어드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호주 사회서비스 의회에 따르면 호주 정부에서 국가 위기를 선언하고 사회 봉쇄를 시행한 기간(2020년 4월 기준), 온라인상에서 '사회서비스'를 검색한 횟수는 120% 증가했다고 한다. 식량지원에 대한 검색은 40% 증가했고 사회보장서비스 관련 검색은 30% 증가했다. 예를 들어 푸드뱅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는 4월 기준 50% 증가했다. 일부 자선기관에서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개인 보호장비를 구입하고,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대체서비스를 마련하느라 서비스 이행에 대한 비용이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 욕구가 증가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이 추가되면서 자선기관에서 감당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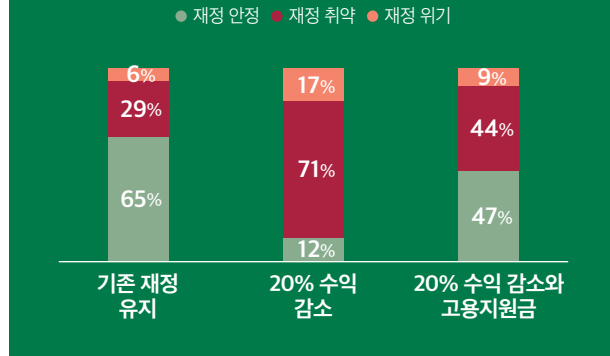
앞서 언급했듯이 자선기관 내 인건비는 평균적으로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자선기관이 직원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우어 커뮤니티는 자선기관의 35%가 코로나19 이후 직원을 줄였고, 8%는 직원을 줄일 계획이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2월 이후 65%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80% 이상의 자선기관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봉사자 감소는 기관 운영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Biddle와 Gray, 2020).

코로나19, 정부 지원금과 자선기관의 지속가능성

정부에서 제공한 코로나 긴급 지원금(Corona Supplement)과 고용지원금(Jobkeeper)은 많은 자선기관에 도움을 줬다. 그러나 여전히 39%의 자선기관은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했고, 33%의 자선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기관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는 수익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많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단축시켜야 하기 때문이다(Our Community, 2020).

수익·고용지원에 따른 재정 상태

20% 수익이 감소한 경우 정부 고용지원금이 없으면 재정이 취약해지는 자선기관은 71%에 이른다.



호주 연방정부는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4월부터 고용주에게 2주마다 1500호주달러를 고용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자선기관도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의 15% 감소를 경험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위의 그림은 코로나19 이후 자선기관의 재정이 유지되는 경우(시나리오 1), 수익의 20%가 감소했을 때(시나리오 2), 그리고 수익이 20% 감소된 상태에서 고용지원금이 지원됐을 때(시나리오 3) 기관의 재정 상태를 추정해 비교한 것이다. '재정 안정'은 수익을 창출하며 운영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재정 취약'은 적자를 내며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기관 자산으로 적자를 최대 6개월까지 만회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재정 위기'는 적자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고 발생하는 적자를 6개월간 만회할 수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시나리오 2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의 20%가 감소한 상태에서, 정부의 고용지원금이 없는 경우 재정이 취약해지는 자선기관은 71% 이르고, 재정 위기에 처하는 기관은 17%다. 이는 전체 자선기관의 88%가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을 겪음을 의미한다. 정부 고용지원금을 받을 경우, 재정 취약 비율은 44%, 재정 위기는 9%가 된다. 정부 고용지원금이 있어도 10개 기관 중 1개 기관은 6개월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선기관의 지속가능성 위기는 직원의 실직 위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기관의 수익 감소는 그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줄어드는 수입에 지출을 맞추기 위해 직원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기관 수익이 15% 떨어질 때 65% 실직이 보고됐다(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2020). 직원 감축은 불가피하게 자선기관의 활동과 서비스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호주 경제가 이전의 상태로 복구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자선기관은 현재 처한 상황에서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변화를 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안에서는 이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방법을 전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이 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부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기관 차원의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고용지원금은 자선기관을 재정적으로 유지하고 직원 고용을 지속하게 돕고 있다. 정부는 2020년 9월 중순 종료 예정이던 고용지원금을 2021년 3월까지 연장시키되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자선기관은 지역사회와 개인의 안녕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경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를 고려해볼 때 자선기관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킨다면, 자선기관이 호주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❶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코로나19가 수그러들 줄 모르고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글 오세웅 리츠메이칸대학
산업사회학부 부교수



코로나19 감염자 추이와 정부 대처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 현황을 보면, 4월 초·중순을 고점으로 한 1차 감염자 수 급증기가 있었다. 이후 8월 초·중순을 고점으로 한 2차 감염자 수 급증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8월 30일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1만59명이며, 누적 감염자 수는 6만8083명, 사망자 수는 1285명에 이른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처 방식에 대해서는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의 초동조치 미흡은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 주도의 적극적 봉쇄를 통한 확산 방지책이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그 원인으로 감염증 방역 의료체계의 미비를 지적할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정부의 리더십 결여가 근본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우선 PCR 검사를 위한 자원 확보와 환경 정비에 대한 정책 결단이 늦어, 지금까지도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 봉쇄정책이 부재해, 지자체 단위의 대응 방식으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무디고 답답한 횡보는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는 집권여당의 정책 판단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쿄올림픽 개최가 연기되고 내년 이후에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지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내수경제의 발목을 잡는 강도 높은 코로나19 방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지원제도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 관련된 지원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도 코로나19 위기를 맞으면서 실업과 고용 불안정, 근로자 수입 감소에 따른 불안감 고조 등으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긴급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주요 시책을 살펴보기로 하자.

1) 특별 정액 급여 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에 해당한다. 신청자에 한해서 수입과 관계없이 1인당 10만엔이 지급된다. 거주하는 지자체 주민기본대장(주민등록)에 등록된 자면 누구나(외국인 포함)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세대주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지를 떠나 피신 중인 자 등은 현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4월 말부터 지자체별 신청이 시작돼 7월까지 대부분 지급 완료됐다. 지급된 10만엔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비 충당이 약 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저축이 26%를 차지해 생활 방어 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소비성향을 알 수 있다. 국민 생활 안정이라는 일차적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지만, 4분의 1이 소비가 아닌 저축으로 쓰인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2) 아동 양육세대에 대한 특별 급여 ‘아동 양육세대 긴급 특별 급여금’과 ‘한부모가정 임시 특별 급여금’이 있다. 아동 양육세대 긴급 특별 급여금은 중학생까지의 자녀를 둔 세대를 대상으로 아동 1인당 1만엔이 지급된다. 한부모가정 임시 특별 급여금은 기존 한부모가정이 받는 아동부양수당과 별도로 기본금 5만엔 및 아동 1인당 3만엔이 지급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가 증명되면 추가로 5만엔이 지급된다.

3) 주거확보 급여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로 거주 중인 집의 월세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자(프리랜서 포함)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3개월간 임대료(지자체별 상한액 있음)를 지급한다. 예외조치가 적용되면 최대 9개

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실업자 대책의 하나로 실시되던 것을 구직센터 등록과 구직신청에 대한 의무규정을 없애고, 코로나19 대책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4) 상병수당 건강보험(피고용자 대상)제도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피고용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 중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일을 쉬었을 경우 최대 1년 6개월간 평균 급여 월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5) 휴업수당 노동기준법에서는 기업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 근로자에 대해 휴업 지시를 한 경우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코로나19 상황에 적용한 것이다. 다만, 정부의 자숙 요청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휴업의 경우는 예외이다. 한편, 기업은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 중 하나인 ‘고용조정 조성금’을 활용해 휴업수당 상당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

6) 코로나19 대응 휴업 지원금 코로나19 관련하여 회사 측의 지시로 근로자가 일을 쉬었지만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일일 평균임금(1만1000엔 상한)의 80%까지 지급된다. 휴업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안과 노사간 협의·조정으로 본 지원금과 함께 상병수당, 휴업수당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7) 미지불 임금 선불제도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 미지불 임금의 80%를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 시 연령에 따라 88~269만엔을 상한으로 하며, 노동기준 감독소에서 관할한다.



8) 생활복지자금 특별 대출 생활자금을 무이자, 무보증으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 ‘긴급 소액자금 대출’과 ‘종합지원자금 대출’로 나뉜다. 긴급 소액자금 대출은 휴업이나 실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활비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20만엔이다. 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가 정부위탁을 받아 업무를 담당한다. 종합지원자금 대출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 재건을 위한 일정 기간의 생활비용을 대출해 준다. 실업 상태가 아니더라도 수입 감소가 크다고 인정되면 이용 가능하다. 단신 세대 월 15만엔, 2인 이상 세대 월 20만엔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3개월분이며, 1년 거치 10년 이내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받아 운영한다.

9) 학생지원 긴급 급여 코로나19로 인해 세대 수입이 감소하거나, 아르바이트 해고나 수입이 5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대학교, 대학원, 전문학교(일본어 교육기관 포함) 재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급여액은 저

소득층의 경우 20만엔, 그 외 10만엔이다. 국고지원을 받아 일본 학생지원기구를 통해서 운영된다.

10) 대학 수업료 감면 및 장학금 지급 2020년 4월부터 실시한 고등교육 수학 지원제도를 코로나19 국면에서 확대 적용했다. 저소득층 또는 그에 준하는 세대(세대 수입 약 380만엔 미만)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교 등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 혹은 연간 최대 70만엔까지 감면해 주고, 장학금(평균 2~3만엔, 최대 월 7만6000엔)을 지급한다.

정책 효과 발목 잡는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성

일본의 코로나19 관련 지원제도는 근로자층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생활비 보전을 위한 현금급여와 기존 사회보장 관련 제도를 활용한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느냐가 긴급사태 대응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다양한 지원금, 수당과 관련된 시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본에서도 이참에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사회보장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 체제하에서 다수파로 거듭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편, 일본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시책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면서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지만, 그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긴급 지원제도의 생명은 긴급성과 즉응성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 정액 급여를 비롯한 많은 현금급여가 대상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빨라야 한 달, 지자체에 따라서는 2~3개월 이상 소요되는 예도 적지 않다. 이는 한국처럼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통합행정처리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지원제도가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일괄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 서면신청이 병행되고 있다. 더구나 본인확인 서류 등 행정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지원금을 손에 쥐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도 ‘마이 넘버 카드’라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지만, 발급 의무가 없어 보급률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정보화 시스템 및 기기의 활용이 생활과 일의 표준이 돼 가는 마당에, 이처럼 더디게 흘러가는 일본의 행정 처리를 보면, 아쉬움과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무엇을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주느냐도 제도 운영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다음 호에서는 기업 대상 코로나19 지원책과 경제 활성화 시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❶

표 **코로나19 관련 지원제도**

지원시책	주요 내용
특별 정액 급여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엔 지급, 세대주만 신청 가능(예외 적용), 우편접수 및 온라인 신청(마이 넘버 소지자)
아동 양육세대 긴급 특별 급여	아동수당 수급세대(1세~중학생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아동 1인당 1만엔 지급
한부모가정 임시 특별 급여	아동부양수당 수급자(한부모가정 수당)에 대해 기본 5만엔+둘째부터 1인당 3만엔 추가, 수입 감소 시 추가 5만엔 지급
주거확보 급여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자 중에서 거주지 임대료 납부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3개월간(최대 9개월) 월세 지급
상병수당(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중,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일을 쉬었을 경우, 최대 1년 6개월간 표준 급여 월액의 2/3 지급
휴업수당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휴업을 지시했을 경우 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의 60% 이상 지급, 기업은 고용조정 조성금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코로나19 대응 휴업 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측 지시로 휴업했지만,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 일일 평균임금의 80%까지 신청 가능
미지불 임금 선불제도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 시 미지불 금액의 80%를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 퇴직 시 연령에 따라 88~269만엔 범위로 지급
생활복지자금 특별 대출 (무이자, 보증인 필요 없음)	긴급 소액자금 대출 휴업·실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 20만엔 이하로 지급 종합지원자금 대출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 재건을 위한 일정 기간까지의 생활비용 대출 3개월간 이용 가능하며 1년 거치 10년 이내 상환 조건
학생지원 긴급 급여	세대 수입 감소, 아르바이트 해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대학교 등 재학생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20만엔, 그 외 10만엔 지급
대학 수업료 감면, 장학금 지급	저소득층 등(세대 수입 380만엔 미만)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혹은 감액(연간 최대 70만엔), 장학금 지급(최대 월 7만6000엔)
학자금 대출, 학생 통신환경 확보 지원	일본 학생지원기구를 통한 학자금 대출(저리/무이자), 4대 통신 사업자에 대해 학생들의 원격수업 등의 활용을 위한 통신환경 확보 요청, 요금 지불 기간 연장 및 통신요금 제한 완화 등
사회보험료 및 공공요금 감면 등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납부 유예 및 감면, 전기·수도·가스·전화 요금 등 납부 유예, 각종 세금납부 유예

2025년부터 초등학생 전일제 교육 의무화



2000년 초반부터 시행된
독일 전일제 교육 확대와
그로 인한 효과를 소개한다.
더불어 전일제 교육 정책에 대한
최신 현황과 앞으로 수행해나가야
할 과제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글 성지혜 독일 RBO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



1990년 통일 전 동독과 서독의 학교는 서로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동독의 학교 시스템은 오전 수업, 점심 식사, 전담 인력에 의한 오후 돌봄으로 이루어지는 지금의 전일제 학교와 같은 방식이었다. 반면 대부분의 서독 학교는 학생들이 오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하교한 후 가정에서 돌봄을 전담하는 반일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통일 직후에도 구 서독 주의 학교는 전통적인 운영 시스템을 선호했기 때문에 전일제 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의 비율은 동독보다 훨씬 낮았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일제 교육 확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00년도 초반이다. 2000년 실시된 OECD 국가별 학업성취도(PISA) 평가에서 독일 학생들의 낮은 학업 수준에 따른 보충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여성 경제활동 인구 및 한부모 가정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 돌봄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전일제 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이 시행됐다. 그 것이 바로 ‘미래의 교육과 돌봄을 위한 투자프로그램(IZBB)’을 통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40억 유로(약 5조원)를 투자해 16개 모든 주 정부에 약 1만개의 전일제 학교를 증축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정책 이후 약 20년 동안 독일의 전일제 학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연방정부는 전일제 학교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결과에 공감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음 단계의 정책을 준비했다. 이에 따라 전일제 교육이 가장 필요한 초등학교(1~4학년)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교 학생이 전일제 교육을 받는 법적 권리를 가진다’라는 법률안이 2019년 5월 14일 의회에서 통과됐다.

전일제 교육의 정의와 유형

독일의 학제는 다음과 같이 초등학교 1~4학년에 해당하는 그룬트슐레(Grundschule),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김나지움(Gymnasium), 게잠트슐레(Gesamtschule)와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로 나뉜다.

전일제 교육은 초등학교와 중등과정(5~10학년) 학생이 오전 정규 수업을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 4~5시까지 추가적인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프로그램은 학습 단계에 맞는 보충수업부터 스포츠, 예술, 음악 활동 등의 과외 활동이 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된다.

16개 주의 학교는 교육과정과 수업모델에 따라 의무형, 부분형, 개방형의 각기 다른 전일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를린의 의무형 전일제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일주일에 최소 4일 정규 수업이 끝난 후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부분형은 일주일에 최소 2일은 의무, 2일은 자유롭게 참여

하는 의무형과 개방형의 혼합 형태이다. 개방형은 일주일에 4일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비용과 점심 식사 비용에 대한 면제 여부는 주 정부 별로 상이하다. 베를린의 경우 교육 비용은 면제이며 2019년 8월부터 모든 초등학교 학생에게 점심 식사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

전일제 학교의 확대 계기와 효과

전일제 학교 확대에 영향을 준 계기는 2000년 실시된 OECD 학업성취도(PISA) 순위였다.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 연구에 따르면 32개 OECD 가입국 중 독일 청소년의 학업 수준은 중하위권인 21위에 머물렀다. 낮은 순위의 원인으로 경제적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학생 간의 학습 격차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상호 간 격차를 줄이고 학습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따른 보충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일제 학교 필요성이 대두됐다. 1990년대 말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교육기관인 학교가 돌봄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점도 전일제 교육 확대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시대·사회적 요구에 따라 학교가 교육과 돌봄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2002년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사민당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정책을 발표했다. ‘미래의 교육과 돌봄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40억 유로(약 5조원)를 투자해 16개 모든 주 정부에 약 1만개의 전일제 학교를 증축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전일제 교육을 시행하는 학교는 4951개로 전체 학교의

표 독일의 학제

초등학교	중등과정	고등과정	대학진학
그룬트슐레 (1-4학년)	인문계		취업
	김나지움 (5-10학년)	김나지움 상급과정 (11-13학년)	
	실업계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 (5-10학년)	직업 교육과정 (2-3년)	

16.3% 정도였다. 이후 전국적으로 총 8262개 학교가 투자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전일제 학교를 증축했다. 독일의 16개 주 정부의 학교는 각각의 서로 다른 수업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전일제 학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연방 정부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독일 연방 교육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전일제 학교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전일제 학교 모니터링, 질적 연구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바탕이 되고 있다. 2012년, 2015년, 2018년에 실시된 16개 주 정부의 학교장들이 참여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일제 교육 시행이 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형편이 어렵고 부모로부터 학습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 특히 이민자 가정 학생의 경우 전일제 교육이 이 같은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일제 교육의 장점은 학교 교육의 연장선으로 제공되는 보충수업 외에도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많은 학교가 스포츠·음악 관련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16년 시행된 독일 베텔스만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도 전일제 교육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66%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전일제 학교 시설의 기능적·환경적인 부분에서도 80%의 부모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또한, 77%의 부모가 자녀들이 전일제 교육을 통해 교실에서의 사회적 유대감을 배울 수 있다고 응답했다.

전일제 학교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연방정부는 자녀가 있는 여성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많은 여성이 자녀 양육을 위해 시간제 근무(50~75%, 즉 하루 4~6시간 근무)를 선택한다. 일하는 시간 동안 전일제 학교가 자녀를 맡아주고, 시간제 근무가 끝난 후 다시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돌봄 공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기업이 협력하고 학교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 수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독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의 73.9%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보다 8.5% 증가한 것이다.

통계자료를 분석해볼 때 자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7~10세) 자녀를 둔 여성의 78%가 일을 하고 있으며 중등학교(10~14세)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83%로 더 높게 나타났다. 독일 연방 교육부는 여성 경제활동인구를 지속해서 늘려가기 위해 초등학교 가정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학교기관이 보조해 줄 수 있다면 자녀를 둔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생이 전일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법률안이 2019년 5월 14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됐다. 독일 청소년 연구소(DJI)가 이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전체 초등학교의 67.5%가 전일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2002년 전일제 학교 확대 정책으로 인해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 비율을 100%로 늘리기 위해서는 시설 건립과 운영비용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생이 전일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66만5000명을 위한 자리가 추가로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 투자비용으로 3억9000유로(약 5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또한, 전체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이 일주일에 5일, 8시간 정규 수업과 돌봄을 받는다고 계산했을 때 2025년부터 운영비로 2억6000유로(약 3600억원)가 지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매년 2%씩 상승하는 교사, 돌봄 교사의 임금도 포함돼 있다.

전일제 학교 참여율은 지역별로 최저 28%에서 최고 91%까지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의 전일제 참여 통계에서 작센(87%), 브란덴부르크(81%), 튀링엔(82%), 베를린(72%) 등 구 동독 지역이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구 서독 지역의 주 정부(바덴-뷔르템베르크, 브레멘, 헤센,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쉐레비히-홀슈타인)의 전일제 학교 참여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구 동독 지역의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더 높았다. 구 서독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함부르크가 91%로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전 통적으로 전일제 교육을 많이 시행하지 않았던 구 서독 지역의 주 정부들이 시설 건립과 운영비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전일제 교육을 위한 돌봄 전담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스포츠 및 예체능 강사 등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성공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16개 주 정부의 학교마다 전문 인력 확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전일제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학생 참여 비율 역시 지역별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력 충원을 위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안정적인 고용 방안 등을 마련해주는 것 역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다.

연방정부는 이번 정책을 위해 2028년까지 투자할 예산이 확보돼 있으며, 앞으로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공동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초등학생은 양질의 교육과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또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의 돌봄 부담이 현재보다 감소함으로써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시간이 멈춘
정다운 방앗간

강릉 봉봉방앗간

봉봉방앗간

강원 강릉시 경강로 2024번길 17-1

운영 시간 | 11:00~18:00

문의 | 033-647-1711

곡식 빵는 방앗소리와
기름을 짜는 고소한 냄새가
가득한 곳, 방앗간. 마을의
복덕방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방앗간은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줄어들었다. 강릉의
'봉봉방앗간'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폐방앗간이었다.
이제는 여러 손길을 거쳐
근사한 카페와 전시 공간으로
꾸며진 '봉봉방앗간'으로
떠나보자.

글 정재림 사진 고인순



세월을 품은 방앗간

강원도 강릉 명주동 골목길에는 이색 방앗간이 있다. 곡식을 빵는 소리와 기름 냄새를 대신해 커피를 내리고, 문화와 예술 활동으로 복작이는 문화공간 '봉봉방앗간'이다. 봉봉방앗간의 옛 이름은 문화방앗간으로 1940년대부터 옛 강릉 시청이 있었던 구도심 지역인 명주동 일대의 명물이었다. 한창때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떡을 해 갈 정도로 성황을 누리기도 했지만, 세월이 흘러 사양길로 접어들자 10여 년 전 문을 닫고 말았다. 이후 2010년 12월에 영화제작자와 미디어교육 전문가, 독립다큐멘터리 감독, 극영화 감독으로 이루어진 4명이 폐업한 방앗간을 인수했다. 네 사람은 1층 29평, 2층 27평 규모의 2층짜리 낡은 근대건축물의 외관과 기본 골조를 그대로 살렸다. 낡은 외관과 미달이문은 물론, 건물 내부에 남은 방앗간 시절의 흔적도 그대로 두었다. 손때 묻은 나무 기둥과, 벽의 얼룩은 세상에 하나뿐인 인테리어가 되었다. 문화방앗간이 운영되던 시절,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과 이웃들의 기억이 담긴 귀중한 문화자산을 보존하자는 취지였다. 그렇게 2011년 12월에 문을 연 봉봉방앗간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생각을 나누고 작업물을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1층에는 커피와 유기농 허브차를 판매하는 카페로, 2층은 문화 예술 전시공간 '갤러리 호호'로, 어느 한 곳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오밀조밀한 매력이 가득하다.



이곳 참 좋다 ‘봉봉’

문화방앗간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 방앗간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바람에 잊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다. 실제로 방앗간이 다시 운영되는 줄 알고 동네 주민이 쌀자루를 들고 방문했던 것. 방앗간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지만, 바뀐 것도 있다. 바로 ‘봉봉’이라는 앞 두 글자다. 봉(Bon)은 프랑스어로 ‘아주 좋다’, ‘맛있다’라는 중의적인 뜻을 담고 있다. 그러니 봉봉방앗간을 풀이하면 맛있고 좋은 방앗간이라는 뜻이 된다.

봉봉방앗간은 특히 커피 맛이 매력적인 곳이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찾아가 직접 공수해 온 신선한 원두가 맛의 비결이다. 카페에서는 생두의 특성에 따라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핸드드립 커피 방식으로 내려준다. 떡을 사러 들렀다가 커피 맛을 깨달았다고 할 정도.

2층의 다락방은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다. 아기자기한 1층과 달리 흰 페인트칠이 된 벽에 가장 먼저 눈이 가는데, 다양한 작품이 걸려있어 차분히 감상하기에 좋다.

2층의 갤러리는 ‘봉봉’의 한자어인 ‘좋을 호(好)’ 자를 겹쳐서 ‘갤러리 호호’라고 이름 붙였다. 누구에게나 즐겁고 좋은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염원이 담겨있다. 갤러리 호호의 첫 전시 테이프는 당시 수능시험을 막 마친 고3 학생들이 맡았고 그 후로 초등학교부터 60살 노인까지 누구나 작가로 참여하면서 강릉 지역의 명물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문화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는 봉봉방앗간 4명의 주인 덕이었다.



봉봉방앗간과 어울리는 정감 어린 음악 추천

갓 내려 고소한 풍미가 가득한 커피 한 잔, 그리고 분위기와 안성맞춤이 음악까지 더해지면 남부럽지 않은 티타임이 완성된다. 봉봉방앗간에서 기억에 오래 남을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이 노래를 들어보자.



꺼내 먹어요

Zion.T



Like A Fool

Keira Knightley



커피 한 잔어때?

허밍어반스테레오

명주동 문화아지트

봉봉방앗간이 생겨날 당시 동네 주민들은 허름한 동네에 허름한 방앗간 건물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에 의문과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그 걱정이 무색하게도 지금의 봉봉방앗간에는 꾸준하게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봉봉방앗간은 명주동에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강릉시는 ‘단오문화 창조도시’ 사업을 2011년에 추진하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2012년 9월에 봉봉방앗간 근처에 위치한 1950년대 건물인 작은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작은 공연장 단(端)’을 열어 힘을 보탰다.

또 10월에는 커피 체험과 전시, 음악, 무용 등 복합예술이 공존하는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명주동애(愛) 아트&콘서트’가 열리기도 했다. 활력을 잃어가던 구도심 명주동이 새로운 문화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강릉의 문화아지트로 발전하고 있는 명주동의 앞날을 기대해본다. ❶





'코로나19·독감' 동시 유행...대비법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시기까지 다가오면서 국민의 걱정이 한층 커졌다. 일단 독감백신 무료접종 대상은 생후 6~18개월, 임신부, 만62세 고령자로 확대된 상황이다. 알아두면 도움이 될 코로나19·독감 동시대비법을 정리했다.

코로나19 vs 독감, 구분법은?

코로나19와 독감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똑같이 인후통, 콧물, 기침 등이 나타나 증상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다.

송경호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의 경우 갑작스러운 고열(38도 이상), 심한 두통, 근육통이 발생하고 호흡기 증상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반면 코로나19는 미열로 시작해 점차 인후통, 콧물, 기침 증상 이후 근육통, 두통, 오한 등이 동반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뚜렷한 후각 저하나 호흡곤란이 발생했다면 코로나19를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상 의심되면 어떻게?

지금처럼 코로나19가 계속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일단 보건소 또는 1339 질병관리본부 대응센터로 전화해 대응법을 문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심한 발열 등이 발생했다면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사람은 학교, 직장에 가지 말고 우선 3~4일간 진통해열제, 콧물·코막힘 완화제, 기침억제제 등 증상 조절 약물을 복용하면서 경과를 관찰한다.

독감백신, 언제까지 맞아야?

독감은 코로나19와 달리 예방백신이 있어 보다 확

실한 대비가 가능하다. 백신은 유행 4주 전까지 접종을 권장한다. 독감은 통상 9월부터 고개를 들어 11~12월 대유행한다. 따라서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접종해야 한다.

다만, 독감은 초봄까지 유행하기 때문에 미접종 시 11월 이후에라도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좋다.

최천웅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으로 독감을 100% 예방할 수는 없지만 백신 접종 시 독감에 걸려도 증상이 덜하며 패혈증 등 치명적 합병증 발생 위험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감백신, 3가 vs 4가?

독감백신의 종류는 3가지 바이러스(A형 2종, B형 1종)를 막아주는 3가 백신과 4가지 바이러스(A형 2종, B형 2종)를 막아주는 4가 백신이 있으며 3가 백신은 국가 무료 지원이 된다.

송경호 교수는 “건강한 사람에서는 두 백신의 예방효과에 차이가 거의 없지만 7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 상태, 독감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예방범위가 넓은 4가 백신이 예방에 더 도움이 된다”며 “의료진과 상의 후 백신 종류를 결정하라”고 권장했다.

코로나19 환자는 일단 완치 후 독감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다. ❶

* 이 기사는 <헬스경향>에서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 90조1536억원 편성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년대비 9.2%증가한 90조1536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안은 정부 전체예산 555조8000억원의 16.2%에 해당하며, 올해 예산 대비 증가 규모(7조6000억원)는 정부 전체 증가분(43조5000억원)의 17.5%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9.4%(6조699억원), 보건 분야가 8.2%(1조569억원) 증가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 △공공의료 확충 등에 편성된다.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자 가운데 노인, 한부모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올해 4조3379억원에서 4조6079억원으로 2700억원이 늘었다. '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1조4185억원→1조7107억원)를 2020년 19%(1조4185억원)에서 2021년 20%(1조7107억원)로 높인다. 장애인과 노인 빈곤 문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30만원 적용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연금도 차상위초과~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이 밖에도 탈수급 지원을 위해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5000명→1만3400명)를 확대하고,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 일자리 5만8000개 운영 및 자활급여 단가를 인상한다.

취약계층 아동 마음 건강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취약계층 아동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힘을 모은다. 양 기관은 8월 28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여파로 취약계층 아동이 겪는 불안·우울 증상 등을 파악하고, 병·의원의 심리상담·치료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정신의학회는 올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229개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0~만12세 아동 약 14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위해 복지부와 정신의학회에서 개발한 '자가 심리진단 설명서'를 전국 시군구 드림스타트에 보급하고, 보급된 '설명서'를 활용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임산부, 보호자 등이 코로나19 또는 일상생활의 심리적 문제와 증상을 평가하는 자가 심리진단 설문지를 작성한다. 작성된 평가결과를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학회 소속 전문의에게 보내면 해당 전문의와 드림스타트는 상담·검사 및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 1400여 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아동은 1인 120만원 한도 안에서 병·의원이나 아동발달센터 등 전문기관의 종합심리검사, 치료를 제공받으며,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계속 지원한다.

치매공공후견 사례집·홍보영상 나왔다

치매 어르신들의 실제 이야기가 담긴 사례집과 동영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 치매 공공후견사업을 통해 도움받은 치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사례집과 동영상으로 제작·배포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을 발굴하게 된 과정, 후견인이 처리하는 재산관리와 신상에 관련된 사무, 변화된 치매 어르신의 생활 등을 담은 총 18건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동영상에는 후견인의 도움을 통해 치매가 있어도 일상생활을 꾸려나가는 2명의 치매 어르신의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주민세를 미납해 자택이 압류될 상황에 처했던 치매 어르신의 주거문제를 후견인이 처리하는 내용도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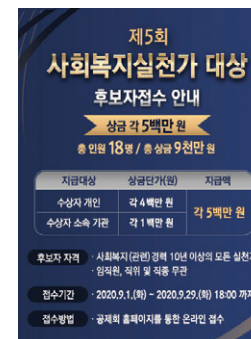


사례집은 시도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 등에 책자로 배포됐으며, 해당 내용은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정보-자료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영상은 보건복지부 및 중앙치매센터 유튜브 채널에 게시돼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 4만1389건... 가해자 76%가 '부모'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3.7% 증가하며 4만1000건을 넘어섰다. 피해아동 발견율은 지난해 2.98%에서 올해 3.81%로 0.83%p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와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아동학대 사례 분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등이 수록돼 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으며, 피해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만5281건(50.9%)으로 여아보다 약 1.8%p 높았고, 만13~15세 아동이 전체의 2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2만3883건(79.5%)으로 가장 높았고, 주요 아동 돌봄 기관인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각 2277건(7.6%), 1371건(4.6%), 139건(0.5%) 순이었다. 학대행위자는 부모 2만2700건(75.6%), 대리양육자 4986건(16.6%), 친인척 1332건(4.4%), 기타 364건(1.2%) 순으로 확인됐다. 2019년 한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42명이며 이 중 0~1세의 아동은 45.2%로 신생아 및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에는 관계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및 추진실태를 담고 있어 국가 아동학대 예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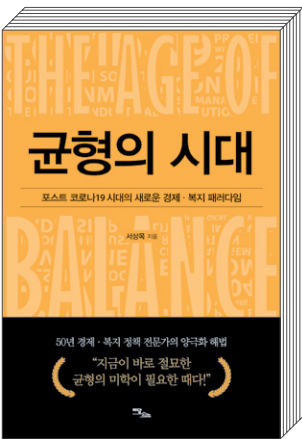
‘제5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 후보자 접수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9월 1일부터 29일까지 '제5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 후보자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직종 및 직급에 관계없이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추천자 자격을 갖춘 자의 추천서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가대상은 사회복지공제회의 설립목적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우리 주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온 사회복지실천가를 발굴·포상하여 사회의 귀감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27명이 수상했으며, 3억800만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올해는 18명에, 총 9000만원의 상금을 전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상자에게만 지급하던 상금을 소속 기관에도 지급함으로써 수상자뿐 아니라 소속기관의 노고도 함께 치하한다. 수상자에게는 각 500만원(수상자 개인 400만원, 소속기관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균형의 시대

서상목 지음, 이담복스



이 책은 지난 몇 년간 저자가 언론에 기고한 글을 현 상황에 맞도록 수정 집필했다. 저자는 지난 50년간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정책 전문가로, 지금도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쩌면 현 정부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적합한 책이 아닐까 싶다. 이 책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경제·복지 발전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사회 양극화 현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책에서 제시한 정책 제안들이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고, 세계화 기반이 흔들리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로 인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고, 우리 사회가 통합과 균형의 길을 가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BOOK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가치경영의 실천 전략

김재구 외 지음, 클라우드나인

팬데믹 위기는 기업의 사회가치경영 실천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금 전세계가 겪고 있는 팬데믹의 원인과 경과와 향후 예상되는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결국 사회적 가치와 관련됐다. 한 마리의 박쥐를 지목했던 손가락은 바로 그 뒤의 인간을 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한국 사회가 그동안 신봉했던 경제지상주의나 빠른 추격자 모델의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과연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당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도를 혁신해 정치적으로는 공공선이 실현되는 공화위의 시대로 바뀌어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창의’의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 이 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가야 할 사람을 중심으로 한 혁신, 사회 혁신,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혁신에 주목하고 사회가치경영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



SSN 직무능력향상교육

직무능력향상
교육이란?

사회복지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발한 ‘사회복지인재 양성’ 교육입니다. 종사자의 실무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월
SSN 직무능력향상
교육과정

*10월 직무능력향상 교육 과정은 실시간 온라인 교육(Zoom 화상강의 프로그램 활용)으로 진행됩니다.

구분	과정명	일정	교육비	정원	교육시간
회계실무	조달업무 손쉽게 익히기	10.12.(월)	50,000원	50명	10:00~17:00(6시간) *교재 택배 발송
지역사회조직화	지역사회조직화사업의 이해와 운영 실무	10.15.(목)		50명	

SSN 복지경영자 과정(컨소시엄)

복지경영자
과정이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협약을 체결하면 우수한 강사의 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생의 인적자원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복지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월
SSN 복지경영자 과정

*컨소시엄 교육 과정은 집합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 교육생 체온 측정, 손소독제 구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아크릴 가림막 설치 후 진행합니다.

구분	과정명	일정	교육비	정원	교육시간
계약실무	사회복지시설 계약실무와 환경(시설)관리	10.7.(수)~8.(목)	무료*	20명	09:00~18:00 (2일, 16시간) *중식 및 교재 제공
회계실무	(초급) 복지예산 효율계획 실무	10.13.(화)~14.(수)		25명	
회계실무	(중고급) 복지예산 효율관리 실무	10.15.(목)~16.(금)		25명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교육비 30,000원 납부

교육신청

사회복지교육정보시스템(www.e-ssn.com)에서 직접 온라인 신청

교육문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교육연수실
T.02-2077-3928 F.02-2077-3948 E.essn@ssnkorea.or.kr